

해외 평생교육 사례

- 영국, 독일, 미국, 일본의 평생교육을 만나다

.....

목차

1. 다양성의 나라 영국의 평생교육
2. 독일의 계속교육
3. 미국, 문턱 없는 학교
4. 일본의 공동학습

.....

작성

영국편: 정선영 | 前희망제작소 연구원

독일편: 강현선 | 前희망제작소 연구원, 베를린 자유대학 정치학 석사

미국편: 김이혜연 | 前희망제작소 연구원, National College Natural Medicine 제학 중

일본편: 정현경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리: 이보라 |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격주로 발간하고 있는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에 2012년 실렸던 해외 평생학습 동향 기사를 재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요

평생교육은 그 개념부터 혁신적이다. 아동 중심, 학교 중심, 교수자 중심이었던 기존의 교육 체계를 전 생애 중심, 전 사회 중심,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고, 이것은 교육에 대한 사회 문화 지형을 바꾸었다. 세계적으로 각 나라의 시민, 활동가, 교육단체들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스템 등을 만들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제도와 정책을 바탕으로 교육의 지형과 문화를 점차 확대하고 다양화하려는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평생교육 개념이 국제사회의 전면에 등장한 지 60여 년, 우리나라에 평생교육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아동·학교·교수자 중심이다. 공교육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교육체계 안에서 평생교육은 취미교양, 직업교육, 시민교육 등 각 영역들로 분절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각 나라의 평생교육을 바라보는 관점과 정책부터 이를 대표하는 단체와 프로그램, 시민 사회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대안교육운동까지 폭넓게 담아내고자 했다. 또한 평면적이고 이론적 측면의 조사와 정리가 아니라 해당 나라를 방문했거나 그곳에서 평생교육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글을 통해 좀 더 생생하고 직접적인 사례로 정리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우리의 평생교육 체계와 내용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생각을 키우고 현장에 접목시키기를 바란다.

총 네 곳의 나라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영국’이다. 영국은 OECD의 ‘학습과 일터를 연계한 개인의 발달을 도모하여 평생교육의 가능성을 증진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상정하는 시장중심형 학습사회론’을 추구한다. 평생교육정책에서 인력자원의 개발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것이다. 이런 평생교육정책은 책무성과 가시적인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화를 형성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한편에서는 시민단체 등 제3섹터 그룹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안교육운동과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개발·운영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영국의 대표적 평생교육단체인 NIACE와 WEA의 역할과 활동 및 자발적 학습공동체, 시민참여 프로그램, 대안교육운동 등을 소개한다. 특히 영국을 직접 방문하여 평생교육 실무자와 학습자를 만나고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했다.

두 번째는 ‘독일’이다. 독일은 정치교육/시민교육이 발달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과거 나치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반성하고, 교육을 통해 올바른 시민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통일 이후 지속적인 시민교육을 통해 동서독 시민들의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독일의 평생교육은 단순히 시민교육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평가 성적은 OECD 국가 평균에도 못 미치지만, 모든 시민이 평생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다양한 교육 혜택을 누리고 있다. 수많은 제반시설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잘 짜인 제도들과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힘이 독일 사회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

독일 편에서는 평생교육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는 사회문화적 배경부터 정책과 제도, 장애아동 통합교육, 아동-시니어교육 등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세 번째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경제, 사회, 복지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정책입안자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입학사정관제 같은 대학제도부터 대안교육까지 교육부분에서 미국의 많은 사례와 제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녹아들고 있다. 그 중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평생교육 제도인 ‘커뮤니티 컬리지’를 소개한다. 커뮤니티 컬리지는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교육기관으로 저학력자, 이민자, 상급학교 진학 목표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이곳을 직접 경험하고 활용한 유학생이 자신과 주변 친구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컬리지에 대해 소개한다.

마지막 네 번째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 협동조합 등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던 사회적 경제 분야의 선배 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활동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 평생학습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에서 유학생으로 사회교육을 공부했고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일본사회의 주민으로서 생활 속에서 평생학습을 만났던 필자는 글을 통해 일본에서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평생학습이 자리하게 되었는지, 현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알려준다.

1. 다양성의 나라 영국의 평생교육

1) 영국에 부는 대안교육의 바람

년 학생, 난 선생? 그런 고정관념은 이제 그만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구분은 필요 없다.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누구나 배울 것이 있다. 공부는 일방적 지식 전달의 과정이 아니라, 공동작업의 과정이다. 공부는 가지런히 정형화된 지식 체계를 축적하는 정제된 경험이 아니라, 날카로운 질문과 자유로운 토론 및 대화와 창의적 아이디어 교환으로 이루어진 역동적 경험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는 비싼 이유가 없다.

영국의 이러한 대안교육운동(alternative education movements)은 고등 교육의 상품화, 스펙화 및 엘리트화에 대한 저항으로 그 역사가 짧지 않다. 최근에는 ‘Occupy’ ‘아랍의 봄’ 등 전 세계적인 반자본·민주주의 운동 물결과 현 영국정부의 대학 등록금 인상, 인문·사회·예술 분야 교수들의 연구비 보조 삭감으로 인해서 그 운동성에 강한 탄력이 붙었다.

Tent City University

Tent City University는 글자 그대로 ‘텐트’에서 하는 공부다. ‘Occupy London’ 시위를 위해 텐트 아래 모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학습 공동체다. Tent City University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온라인 캘린더는 등록된 워크숍 일정으로 짝짝 채워졌다. 시위가 진행되는 몇 개월 동안 일련의 저명 작가, 사회활동가, 언론인, 교수 등이 워크숍을 열었고, 쇼핑 나온 사람, 학생, 사회활동가, 관광객 등 관련 주제에 대한 소위 전문가부터 평범한 시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워크숍에

TENT CITY UNIVERSITY
ANYONE CAN TEACH, EVERYONE CAN LEARN - OCCUPY LONDON

ABOUT EVENTS CALENDAR ECONOMICS MEDIA SUBMIT AN EVENT CONTACT OCCUPY LONDON

Welcome to Tent City University

This is a space to learn, share knowledge and develop skills through a wide series of workshops, lectures, debates, films, games, praxis and action. As formal education becomes more and more commodified and inaccessible, here we have an opportunity to explore alternatives. Because between us we have all the resources we need.

Anyone can teach, everyone can learn – and the two go hand in hand. Feel free to [propose sessions](#), listen to new ideas and share with others what you know or want to know.

Post eviction we remain committed to promoting collective wisdom and looking at how we use knowledge together. We're now focusing on how we relocate TCU both **conceptually and physically**. We will focus on outreach and communication using teach outs and holding TCU events in many places. We will be **surprising and unlikely**, creating a database of places closed and open.

Please email suggestions to tentcityuniversity@gmail.com.

45 RESPONSES TO WELCOME TO TENT CITY UNIVERSITY

EVENTS
April 2012

M	T	W	T	F	S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GET INVOLVED!
To propose a session / film / workshop fill in [this form!](#)

How does this work?
As part of Occupy London, we've set up a temporary space for teaching and learning. This is an open space and anyone is welcome to submit an event/lesson/discussion using the form above.

We then pencil the session into our

Tent City University
<http://tentcityuniversity.org/>

참석했다. 금융위기, 아랍의 봄, 신학, 신용협동조합 설립하기 등 다루는 주제도 매우 광범위했다. 각계각층,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에너지 넘치는 의견 교환과 질문을 통해 정치·사회·교육적 통념에 대해 날카롭게 도전했다.

Tent City University는 즉흥적으로 만들어져, 빠르게 확산되었기 때문에 장기적 운영 계획이 수립될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Occupy 2.0’이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그 중요한 한 축으로 Tent City University 제 2라운드가 열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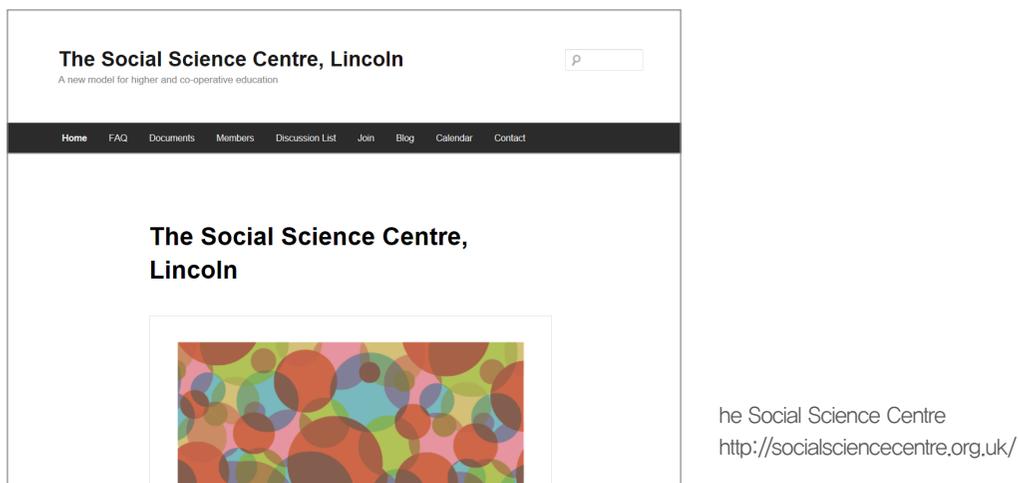
Tent City University의 웹사이트 메인 메뉴 중 ‘Economics’라는 탭을 클릭하여, ‘Occupied Economics’라는 온라인 학습과정을 수강해 보는 것도 좋다. 단 20분 또는 5분만 투자하면 ‘Diploma in Occupied Economics’ 또는 ‘Certificate in Occupied Economics’ 증명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자칫 비장할 수도 있는 주제를 이렇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경쾌하게 전달하는 방식이 재미있다.

Social Science Centre

2010년 여름, 높은 접근성과 참여자들 간의 협업을 중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 Lincoln 지역에서 싹을 틔웠다. 전통적 방식의 대학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지향하는 학교지만 기존 대학들과 경쟁할 생각은 없다. Social Science Centre는 그들과는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2012년 가을에 첫 입학생을 받을 예정이다¹. 등록금은 없다. 학생과 선생 그리고 운영스텝 간 구분도 없다.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비위계적·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센터가 운영된다. 약 20명의 입학생을 받을 예정이며, 대학 학위 수준에 비견될만한 졸업 증서가 제공될 예정이다. 증서 한 장 달랑 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학문적·지적 성과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기술할 계획이다. 학사 학위는 6년, 석사는 4년, 박사는 8년 정도의 파트타임 학습 기간이 필요하다. 제공된 증서의 학문적 우수성 검증을 위해 준회원 자격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객관적 검증자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정해진 등록금은 없지만 학생과 선생들이 원하거나 여유가 된다면 자신들의 월급 중 1시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자율적으로 기부할 수 있다.

정부의 대학 연구 보조금 삭감 조치에 의해 촉발된 이 운동은 대학의 시장 상품화에 저항하며 우리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이 센터는 협동조합 방식을 지향한다. 모두가 주체가 되어

1 이 리포트는 2012년 4월에 작성했다.



서로 배우며 함께 기관을 운영한다. 수업 역시 이러한 기초 하에 열린 토론, 절충, 협업으로 구성될 것이며 조사 연구 또한 선생과 학생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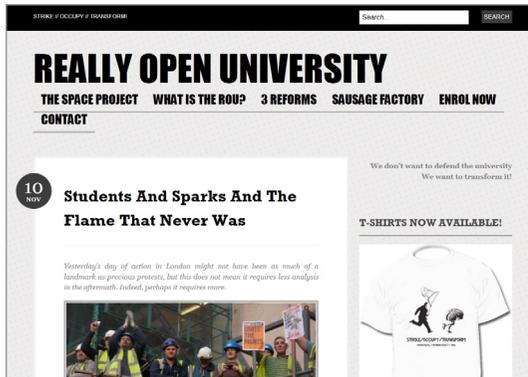
현재 30명 정도의 교수와 운영스텝이 참석을 약속했다. 대부분은 University of Lincoln 소속이다. 이들은 그들이 살고 싶은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학교를 꿈꾼다. 지역에 튼튼히 뿌리를 둔 채 서로 얼굴을 맞대고 나누며 협동하는 리얼 학습 공동체의 모습이다.

Really Open University

대안교육운동은 진정한 대중 지성 향연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추상적 개념이 아닌, 물리적으로 진짜 존재하는 공간이며,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접속하여 함께 공부하고 성장하는 공간이다.

Really Open University는 이러한 학습 공간을 지향하며 리즈(Leeds) 지역에 문을 열었다. 그들의 미션은 개인의 창조력과 비판적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자유롭고 주체적인 교육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다. 특정 집단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학교다.

대중 강연·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지만 Really Open University의 정수는 ‘스페이스 프로젝트(Space Project)’이다. 이 프로젝트는 학교 밖 학습 공간 부족이라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하지만 단순히 학습 행사 및 모임을 위한 공간 대여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곳의 특징은 단일 프로그램들 사이의 매칭에 있다. 스페이스 프로젝트 담당자는 신청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 서로 만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절히 매칭해 준다. 일종의 큐레이터 또는 중매쟁이인 셈이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다채로운 아이디어, 지식, 프로젝트, 사람들 간의 만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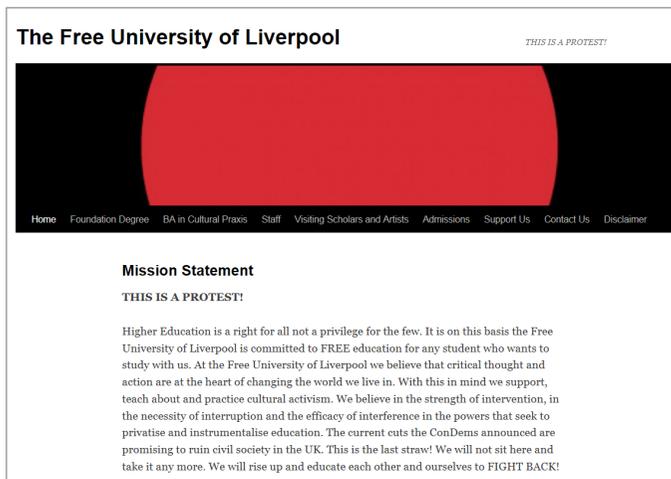


Really Open University <http://reallyopenuniversity.wordpress.com/> (좌)
 The Space Project <http://spaceproject.org.uk/> (우)

The Free University of Liverpool

The Free University of Liverpool은 소수를 위한 특권적 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교육을 상상한다. 영국 정부의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지만, 단순히 돈 문제뿐 아니라 영국 대학 교육의 전반적 문제에 대해 이슈를 제기한다.

이 학습 프로젝트의 특징은 예술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예술가, 사회활동가, 교육자들이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예술을 경험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한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원활동가들이다. 첫 교육과정으로 2011년 10월에 6개월짜리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2012년 10월 3년짜리 Cultural Praxis라는 학사 학위 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The Free University of Liverpool
<http://thefreeuniversityofliverpool.wordpress.com/>

분위기만 잘 타면 된다고? 천만의 말씀

Social Science Centre의 Mike Neary에 의하면, 이러한 실험적 대안교육운동의 활성화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다.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세계적 재정 위기에 따른 각국의 긴축 정책 등으로 인해 뭔가 해야만 한다는 시민들의 자발적 결의가 하나로 결집되면서 이러한 역사적 흐름이 조성될 수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Neary는 따끔히 충고한다. 각자가 그 흐름의 주체로서 비판적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영국에서 실험되고 있는 다양한 운동들이 다른 지역에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라지만 단순히 카피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단순 복제는 또 다른 형태의 상품화 및 대량 생산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영국 평생학습을 지키는 NIACE(The National Institute of Adult Continuing Education)

NIACE(The National Institute of Adult Continuing Education)는 성인의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단체로 한국의 평생교육진흥원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NIACE는 자선적 성격을 띤 비영리/비정부 기관이자, 천 개(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1921년에 설립되었다. 평생학습 관련 비정부기관 중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한다. 하는 일은 캠페인 진행, 조사 연구, 컨설팅 서비스, 대정부 정책 활동, 관계자 네트워킹 지원, 출판, 전문정보 제공, 교육과정 제공 등이다. 그 중 몇 가지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Adult Learners' Week

Adult Learners' Week은 영국 내 최대 평생학습 축제로 매년 전국적으로 약 10만 명이 참가한다. “평생학습자들을 축하하고, 영감을 불어넣고, 참여시키자 (Celebrate, inspire and engage adult learners)”를 모토로 하는 Adult Learners' Week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수 학습자 및 학습기관을 선정하여 시상
- 평생학습단체들의 다양한 학습 이벤트 개최 및 체험 기회 제공
- 평생학습 정책 컨퍼런스, 의회 리셉션 등을 통한 대정부 정책 활동
- BBC, 가디언(The Guardian) 등 유력 언론의 집중 조명 유발
- 유수의 후원 기관 확보

Adult Learner' Week
<http://www.alw.org.uk/>

이러한 다양하고 전략적인 행사 개최를 통해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일 뿐 아니라, 정부와 사회 전반에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하게 각인시키고 있다.

IFLL (Inquiry into the Future for Lifelong Learning)

IFLL (Inquiry into the Future for Lifelong Learning)은 NIACE가 발주한 독립 연구 프로젝트로 성인평생학습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성을 제시한다. 2007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약 2년간 진행됐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메시지는 현 시대상에 맞도록 평생학습의 큰 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화, 청년 취업연령 상승, 빠른 환경 변화에 따른 잦은 전직, 다양한 고용 형태의 출현 등과 같은 급속한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개인의 인생 각 시기에서 학습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 인생 전체를 4단계, 즉 25세 이전/ 25-25 / 50-75/ 75세 이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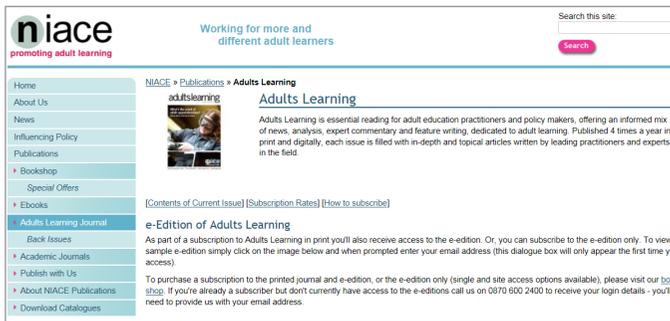
Inquiry into the Future for Lifelong Learning
<http://www.niace.org.uk/lifelonglearninginquiry/>

동, 학습, 여가 간의 시간 배분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정의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50세 이후의 계속 교육에 대한 재정 확대, 풀타임과 파트타임 학습 간 재정 지원 차별 철폐, 시민의식 배양의 중요성 강조, 지역 및 개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학습 제공 등의 내용이 눈길을 끈다. 2년간의 연구로 <Learning Through Life>라는 주 보고서 외에도 방대한 양의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Adult Learning

Adult Learning은 NIACE가 1년에 4번 발행하는 평생학습 저널이다. 평생학습계의 저명한 연구자 및 활동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보고서, 전문가 칼럼, 뉴스 등을 담고 있어 평생학습 관계자 및 정책 수립자들에게 필독 저널로 통한다. 구독 신청하면 우편으로 책자를 받아볼 수도 있고, 인터넷판 구독도 가능하다.

- 책자+인터넷판 : 해외 개인 £54 / 단체 £85
- 인터넷판 : 해외 개인 £35 / 단체 £55(1인) 또는 £95(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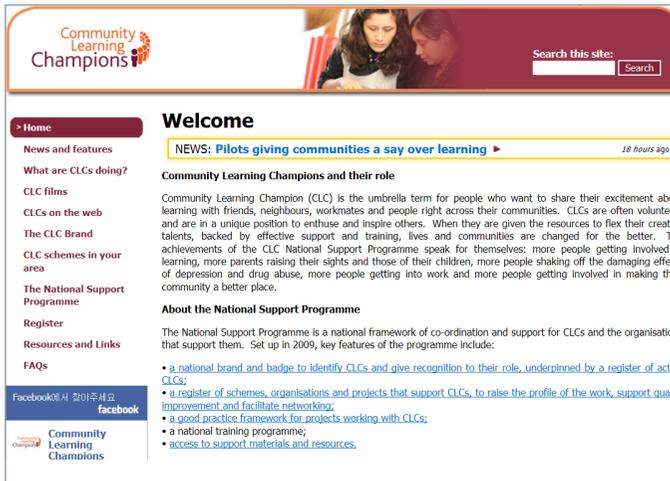


Adult Learning
<http://www.niace.org.uk/publications/adults-learning>

Community Learning Champions

Community Learning Champions는 평생학습 홍보대사로서 친구, 이웃 또는 완전히 낯선 사람들에게 평생학습의 좋은 점을 홍보하고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자원활동가이다. NIACE는 이러한 Community Learning Champions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영국 전역에 걸쳐 약 50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챔피언들의 관련 스킬 향상 교육 및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11년 3월 통계에 따르면 약 2천 명이 지역사회 학습챔피언으로 등록하였고 그들의 활동을 통해 약 10만 명에 달하는 소외 지역의 주민들이 학습 기회를 얻었다. 10만 명 중 무려 70%가 무직자였다고 한다. Community Learning Champions는 소외 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참여



Community Learning Champions
<http://www.communitylearningchampions.org.uk/>

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

NIACE는 오랜 역사와 활동의 다양성으로, 담고 있는 정보가 매우 풍성하다.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 웹사이트만도 수십 개에 이른다.

3) 소비가 아닌 참여로 만드는 배움

“U3A는 Learning Co-op(학습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군가는 그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참여하여 서로 배우고 동시에 서로 가르치는 순환적 학습의 장입니다. 수업에 들어와 그냥 의자에 앉아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만들어 가야죠.”

-Pam Jones(U3A의 South East 지역 이사)씨 인터뷰 중에서

“Camden Town Shed는 나 개인의 공간도, 특정 기관이 소유한 공간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멤버 모두의 공간입니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community initiated), 멤버들이 서로 돕는(self-help) 형태의 조직이 가장 지속력 있는 강력한 조직입니다.”

-Mike Jenn(Camden Town Shed의 회장)씨 인터뷰 중에서

교육이라고 하면 학교, 학원, 주민센터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업목록을 이리저리 살핀 후 적당한 수업을 찾아 등록하고, 수업이 있는 날 교실에 들어가 조용히 선생님의 가르침과 지시를



Camden Town Shed의 Mike Jenn 회장(좌) U3A Fetcham 멤버들(우)

따르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마치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듯 교육도 또 다른 이름의 소비 행위쯤으로 여겼다고나 할까? 하지만 영국의 U3A와 Camden Town Shed를 방문한 후 이런 안일한 생각은 여지없이 깨졌다.

중국의 높은 성장률을 능가하는 유일한 조직인 U3A

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 즉 U3A는 은퇴한 시니어들의 학습 공동체로서 각 지역에서 자립적,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다. 현재 영국에는 약 840여 개의 U3A가 설립돼 있고, 회원은 약 27만 5천 명에 이른다. 요즘 2주에 1개 꼴로 지역 내 새로운 U3A가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U3A 회원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중국보다 성장률이 높은 조직은 U3A가 유일할 거라고 자랑 삼아 말한다. 전 세계적 현상인 고령화 사회로 인해 은퇴한 시니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시니어 숫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U3A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선생과 학생 구분은 NO.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수업

U3A는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University라는 이름 때문이었을까? 프랑스에서는 좀 더 학문적 수업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즉,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one-way 방식 같은 형태 말이다. 그러던 것이 1982년에 영국에 전해져 영국 방식의 U3A가 발전하게 되었다. 선생과 학생 간 구분이 있는 강의보다는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two-way 방식이다. U3A에서는 선생이라는 말 대신 코디네이터(coordinator)라는 말을 쓴다. 회원들 중 특정 내용에 대

해 전문성이 있는 회원이 코디네이터가 되어 수업의 진행을 도울 뿐이다. 일방적인 강의 방식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참여와 서로 간 지식의 나눔이 수업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코디네이터가 혼자 모든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수업을 준비한다. 수업에 들어와 잠자코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

자율.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U3A가 이렇듯 회원 모두의 참여, 즉 주인의식을 중요시 하는 것은 자율적, 자립적 조직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U3A는 외부의 어떤 재정 지원도 거부한다. 기본적으로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외부에서 재정 지원을 제안해 오는 경우도 있다. 사실 솔깃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지원에 따른 제반 조건들로 인해 회원들의 자율이 제한될 우려가 있기에 거절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재원이지만 이렇듯 U3A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 때문이다. 코디네이터들의 수업 진행, 조직 운영에 수반되는 각종 행정 업무 등 모든 U3A 업무는 회원들이 무보수로 직접 처리한다. 또한 조직이나 단체라고 하면 보통 독립된 공간 마련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U3A는 물리적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고정 비용을 감내할 필요가 없다. 주로 회원들의 집이나 또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 교회 등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수업이나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매월 회의를 진행하는 지역 교회의 강당(좌), 두 번째 미팅이 진행된 community center(우)

자립, 자조 조직이 가장 강력한 형태의 조직이다

Camden Town Shed를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Camden Town Shed는



community center 2층에 자리한 Camden Town Shed(좌). 회원들이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우)

2011년 5월 퇴직을 앞 둔 사회적 기업가인 Mike Jenn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퇴직 후 사회생활의 단절로 어려움을 겪기 일쑤인 남성들을 위해 지역 목공소를 만들고 싶었다. 목공소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연장, 자재 등 어느 정도 돈이 필요했다. 기획서를 들고 여러 군데 문을 두드려 펀딩을 받을 수 있었다. 단순한 애걸이 아닌 명확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펀딩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초기 비용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펀딩을 받긴 했지만, Jenn는 앞으로는 자립적으로 목공소를 운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어딘가에서 펀딩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그 후원처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힘들지만 목공소에서 만든 물건의 판로를 개척 한다든지, 회원이 아닌 일일 사용자에게 약간의 사용료를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적 재원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다. 특정 후원 조직의 이름을 단 목공소도, 나만의 목공소도 아닌 ‘우리의 목공소’를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Jenn는 이러한 자립적, 자조적 조직만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물론 회원 간 다툼이나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Camden Town Shed도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을 기르면 그 무엇보다 강력한 조직이 바로 이러한 self-help 조직이라고 그는 말한다.

자율적 참여가 만들어내는 열정과 활기

USA와 Camden Town Shed를 방문하며 가장 크게 감명 받은 건 그들의 눈빛과 몸짓에서 뿜어 나오는 열정과 활기였다. 항상 어떤 의무감이나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으로 무언가를 배워왔던 나에게, 배움 자체에 대한 열정과 환희, 함께하는 사람들과 공유의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무언가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는 감동이 있었다.



U3A 회원이 손수 만든 수업 소개 판넬을 가지고 설명하는 중(좌) Camden Town Shed의 Mike씨가 그동안 만든 물품사진을 보여주고 있다(우)

방문을 해도 좋겠냐는 이메일에 대한 즉각적이면서도 친절함 답장, 미팅 장소 및 시간에 대한 상세한 설명, 우리 방문단을 맞이하는 따뜻한 눈길, 우리가 하나라도 더 경험하고 갈 수 있도록 신경 쓴 세세한 사전 준비, 자신들이 하고 있는 학습 활동을 설명할 때의 그 진지하면서도 열정적인 몸짓. 귀찮을 만도 했을 텐데,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세세히 신경 쓴 흔적을 느끼며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무엇보다 그러한 준비들이 전혀 가식적이지 않고 즐기며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니, 대접받는 우리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그 열정에 감염되는 느낌이였다. 이런 것이 바로 자율적 참여가 만들어 내는 힘이 아닐까?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에는 언제나 피로와 매너리즘이 있다. 또한 받기만 하는 서비스에는 언제나 불만과 불편함이 있다. 자율적 참여로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습을 행할 때만이 진정한 배움에 대한 환희와, 함께 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물어날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4) 개인적 학습을 넘어 사회적 학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은?

세상에는 참 많은 교육들이 있다.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과정, 여가 시간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취미 과정, 삶의 의미를 곱씹어보기 위한 인문학 과정,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나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외국어 과정 등. 이 다양한 교육들의 공통점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나 자신의 능력과 가치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즉, 그 중심에는 '나'가 있다.

영국도 이런 교육을 많이 한다. 특히나, 영국의 예전 같지 않은 경제 상황과 약해진 대외적 위상으로

인해 인문학 위주의 성인 교육에서 그 방향을 선회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인의 기술력 개발 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평생교육 정책으로 인해, 그 품격(?) 있던 영국도 지나치게 가시적인 성과를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

개인적 학습을 넘어 사회적 학습으로

영국은 근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최초로 이룩한 나라이자, 16세기 무렵에 이미 민간의 자선활동관련 법령이 제정되었을 만큼 시민 참여 및 제3섹터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이다. 또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영국 정부의 오랜 정책 기조에 따라 정부정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3섹터의 역할을 중요시해왔다. 2010년 5월 출범한 캐머런 정권은 이러한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Big Society(큰 사회)'라는 정책을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권력을 지역사회, 즉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획기적이고 다양한 관련 정책과 대안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시민들의 역량 향상 교육이 있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된 'Big Society'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할 주체인 시민들의 체질이 우선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롭고 참여적인 민주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이러한 교육은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나의 문제, 사회적 차원의 의미를 강조하는 교육이다.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지자체의 정책 및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방 행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지식, 스킬 및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다.

사실 사회적 의미가 강조된 교육이라 해서 개인적 이해와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사는 마을 또는 국가의 행정이나 법률 등 정치 사회적 문제가 내 인생을 알게 모르게, 때로는 드러내놓고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Marmot Review의 <Fair Society, Healthy Lives>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 문제에 대한 개인의 적극적 참여가 개인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더 높이고 개인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사회 참여를 통해 내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다는 의미이리라.

참여하라 (Take Part)!

언뜻 감이 잘 안 잡히는 시민 참여 또는 사회적 교육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위해 영국 중앙 정부와 지자체, 제3섹터 단체, 교육기관 등이 협력하여 함께 진행한 'Take Part'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Take Part 프로그램은 정부의 Big Society 정책 방향성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진행한 프로젝트다. 정부 부처인 The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여러 단체들의 협력과 자문을 받아 The Community Development Foundation에서 운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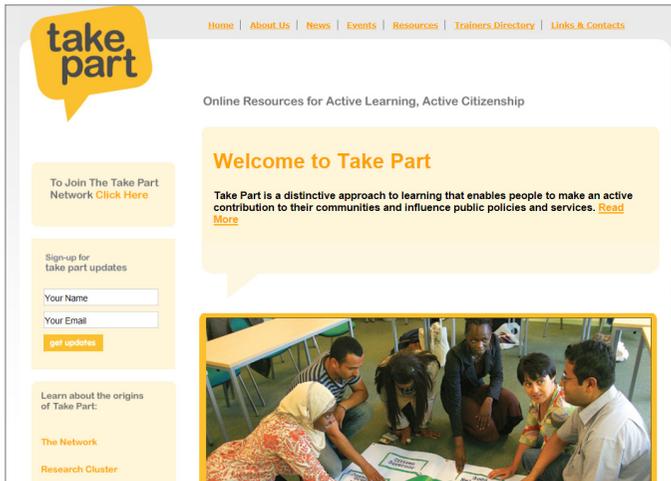
Take Part 프로그램은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성공적으로 진행된 ALAC(Active Learning for Active Citizenship)프로그램을 발전시킨 것이다. 즉,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전부터 진행돼 온 정부 권력의 지역사회 이양 및 시민 참여 활성화 노력에서 얻은 성과, 경험 등 소중한 교훈을 바탕으로 이를 진일보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Take Part는 영국 전역에 걸쳐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약 19개 지역에 Take Part pathfinders(선도자)라는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소외 지역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가 특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여 그러한 지역이 주로 선정되었다. Pathfinder는 지자체, 제3섹터 단체, 교육기관 등 지역 내 다양한 단체를 포함하며,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그 지역 이슈 및 특성에 잘 맞는 혁신적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교육 과정, 리더십 프로그램, 공공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Take Part approach(접근방법)에 따라 제공된다.

Take part approach의 주요 특색 중 하나는 ‘참여자 중심’이다. 어떤 위대한 사람의 성공 비결 및 사례를 쫓아 그대로 모방하려고 애쓰기 보다는 프로그램 참여자들, 즉 특정 공동체 멤버들의 특수한 상황, 이슈, 특성, 역량 등 그들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함께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이론 습득 위주의 교육보다는 현장 경험을 통한 학습, 자기 성찰에 기반한 배움, 실제 구체적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중시한다. 이러한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사들은 지원적, 협력적, 안정적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 주민들은 지역사회 내 의사결정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지식, 스킬,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지자체들도 Take Part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면서 지역 주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들의 영향력 행사에 방어적이 아닌 좀 더 열린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전국 단위의 Take Part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종결됐지만 Take Part approach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녹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지역에 따라 독립적으로 새로운 펀딩이 이어져 프



take part
www.takepart.org

로그램이 계속되기도 한다. 또한 ‘Train the Take Part trainers’라는 Take Part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력들이 전국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 Take Part Network라는 오픈 멤버십 조직이 결성되어 있어 그 확장성은 여전히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이트들을 보면 솔직히 좀 놀란다.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서둘러 대충 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공을 챙기거나 생색을 내려 하기 보다는 경험을 통해 축적된 값진 지식과 노하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그 내용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세. 귀찮을 만도 할 텐데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겨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일을 제대로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런 정신이 바로 영국의 그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만든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영국 방문 시 참여했던 컨퍼런스 장소 안, 여러 활동을 소개해놓은 패널 중 Take Part 활동 사례 내용.

리사 이야기

Take Part는 단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그림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는 게 사실이다. 여기 리사라는 여성의 Take Part 프로그램 참여기를 통해 한 발짝 더 Take Part에 다가가 보자.

리사는 소위 ‘백수’였다. 직업을 구하기 위해 옥스퍼드에 있는 한 평생학습대학에서 구직자 대상 사회간병 수업을 이수하였다. 이 수업을 통해 지역 내 한 자선 단체에서 자원 활동도 시작하게 되었고, ‘Helping in School’이라는 수업도 계속 듣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0년 9월 Take Par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던 ‘Sharing Skills’ 수업을 만난다.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지역 초등학교에 학부모와 교사 간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이 지역은 옥스퍼드 내에서 소외된 지역 중 하나였다. 수업을 듣던 리사와 몇몇이 주축이 되어 학교에 ‘Parent’s Voice’라는 조직을 구성하였다. 리사의 의도는 이 조직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공동체에 속한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그냥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부모들의 자녀와 학교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져 좀 더 나은 학교 환경이 만들어지고, 학부모와 자녀 간 관계도 개선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Take Part 프로젝트 이후 현재 리사는 학교 운영 위원이자 해당 지역의 교육 협의체 및 학부모 협의체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그녀의 열정을 좀 더 전문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대학에서 사회과학분야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이처럼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지역에서 이웃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풀어가며 지역의 참 주인으로 자율적, 자발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Take Part의 핵심이 아닐까 한다. 이 사회는 한 사람의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다수의 일상적 작은 영웅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일 것이기 때문이다.

5) 시민참여교육, 투 트랙(Two Tracks)이 필요하다

마을 공동체가 무너졌다

마을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정다운 이웃, 서로 돕는 이웃, 마을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이웃이란 말은 이제 옛 말이다.

장면1.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누군가 함께 타기라도 하면 불편하기 짝이 없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어떡하나 싶어 엘리베이터 전광판만 뚫어져라 응시한다. 말이라도 걸어오면 어떡하나 싶어 휴대폰을 꺼내 들어 열중 모드로 전환한다. 마침 밤이라면 정체도 모르는 이 이웃이 언제 돌변할지 몰라 무섭기 짝이 없다.

장면2. 우리 옆집은 가내 목공소라도 차린 걸까? 가수 지망생이라도 사는 걸까? 옆 집 애들은 하나같이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겪고 있는 게 아닐까? 정말 시끄러워 살 수가 없다. 무 개념 인간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닥다닥 꼭 붙어살건만, 이웃에 대한 예의나 배려라고는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 자기 가족 밖에 모르는 꼴 보기 싫은 인간들. 이웃이 아니라 웬수라 부르고 싶다.

장면3. 교복을 간지나게 차려 입은 고딩들. 아니 중딩인가? 보란 듯이 담배를 피우신다. 앗, 그 중 한 녀석은 같은 패거리가 아닌가 보다. 뺨 뜯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 마을의 어른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다. 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일까?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청소년들, 웬만한 성인 조폭보다 더 무섭다. 저 아이들의 표정을 보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포스를 풍긴다. 괜히 애들 눈에 띄지나 말고 조용히 나가던 길이나 가자. 내가 배트맨 의상으로 짠 갈아입고 우리 동네 범죄를 다 소탕할 수도 없는 일. 동네 경찰은 뭐 폼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들 하겠지. 나는 내 일이나 잘 하면 된다. 내 코가 석자인데, 주제에 누굴 간섭하겠나.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시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회복’ 요즘 많이 들려오는 얘기다. 구시렁구시렁 투덜거리지만 말고 직접 나서란다. 민주주의 사회는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거란다. 문제가 있으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하란다. 내가 사는 동네,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내가 참여하는 만큼 변한단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단다. 맞는 말인 거 같다. 하지만 현실은?

영국의 대표적 사회혁신 단체인 ‘The Young Foundation’의 벤처 프로젝트 중 하나인 ‘The U’는 현재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을 실험 중이다. The U의 조사에 의하면 지역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 즉 참여핵심(Civic Core)이라고 부를 수 있는 비율은 어느 지역 사회를 막론하고 5%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적극적 시민 참여를 부르짖어 봤자 이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참여 시민의 저변이 확대되기 보다는 Civic Core의 참여 강도만 더 높아질 뿐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민 참여 및 지역 사회 내 구성원 간의 유대 관계 형성이 좋은 것이라는 데 이성적, 당위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실제로는 참여하기를 꺼린다. 끈끈한 이웃 관계에서 기인한 과도한 간섭,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그들은 부담스러워 한다.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긴 출퇴근 시간, 가족 대소사만으로도 현대인들은 이미 충분히 바쁘다. 그리고 힘들다. 지역 이슈에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직접 참여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The U가 실시한 대 시민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이웃과의 연대, 참여의 정도는 내 이웃의 얼굴을 아는 정도, 그들의 이름을 아는 정도, 조금 더 나아가 이웃 집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정도라고 한다. 이웃들로 구성된 특정 모임에 참여한다던지, 동네 문제 해결을 위해 이웃들을 모아 비공식 모임을 조직한다던지 하는 정도의 관계는 그들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시민들은 동네 상점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언급했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의 문제점이라든지 중소 자영업자 살리기 등의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웃들 사이에 인간적 관계라는 관점에서 말이다. 지역 사회에서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즉 내 이웃이 운영하는 상점에 가면 주인이 나를 알아본다. 서로 눈인사를 한다. 조금 친해진 주인장과는 가끔 몇 마디 인사말을 건네기도 한다. 어제 동네에서 있었던 얘기를 나누기도 한다. 그 주인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 필요는 없다. 서로의 집을 방문하는 친구 사이가 될 필요도 없다. 그저 안면이 있는, 인사를 나누는 이웃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끈끈한 연대, 긴밀한 공동체가 아니다.

Weak Ties(약한 유대)

The U가 꿈꾸는 공동체는 ‘약한 유대 (Weak Ties)’가 활발히 작동하는 사회다. <The Strength of Weak Ties>의 저자 Mark Granovetter에 따르면 ‘약한 유대’란 이웃과 서로 눈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관계, 동네 단골 노점상 주인에게 매일 아침 신문을 사는 정도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한다. ‘약한 유대’는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집단의 가치나 규율에 따르거나, 집단의 행동규범에서 벗어났을 때 눈총이나 지탄을 받거나 하는 등 강한 연대 형성에 필요한 요구들을 따라야 하는 부담 없이 사람들 간에 형성할 수 있는 첫 단계의 연대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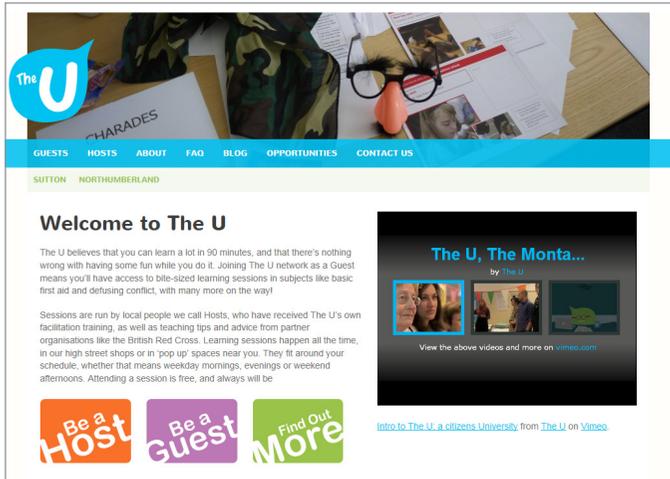
우리는 은연중에 끈끈한 유대에 기반을 둔 공동체가 ‘옳은 것’이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다. 과연 현실은 어떨까?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이고, 다양성이 점점 심화되는 사회이다. 즉, 현재

를 살아가는 공동체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 중 하나는 끊임없는 변화와 새로운 사람들의 유입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이다. 하지만 강한 연대를 지닌 공동체는 편안함, 예측 가능성,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적 성향을 띠게 마련이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변화를 배척하기 마련이다. 반면 ‘약한 유대’는 바쁘고 다양하고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부담을 꺼리는 특성을 충분히 포용할 만큼 유연성이 높다. 또한, 때로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충분한 책임을 느낄 정도는 압박을 가하기도 하는 관계다. 미미한 연대인 것 같지만 위급 상황에서는 기대치 않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관계인 것이다. 또한 정보와 네트워크가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현 시대에 ‘약한 유대’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지식과 정보가 흘러갈 수 있는 채널로 작동하게 되어 새로운 사회적 약자인 네트워크 소외 계층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너와 나를 이어주는 90분간의 경험

이러한 ‘약한 유대’ 형성을 돕기 위해 The U는 새로운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험 중에 있다. 2010년 10월부터 시작된 이들의 고민은 2011년 6월에서야 첫 교육 프로그램 실시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The U 교육의 기본 목적은 단순하다. 그저 참여한 학습자들이 서로 말문을 트기를, 서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랄 뿐이다. 각 교육은 약 90분 동안 진행된다. 그리고 재미있게 진행된다. 책상 앞에 앉아있기 보다는 활동량이 많고, 뭔가를 쓰거나 읽을 필요도 없고, 게임을 하거나 비디오 시청을 하는 식이다. 또한 고정된 교육 장소에서 세션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심의 쇼핑몰 내 빈 공간에 팝업(pop-up) 교육 장소를 설치하는 등 학습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간다. 이러한 짧고 재미있고 이동하는 일회성 교육은 학습자의 심리적, 물리적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교육 재신청률도 꽤 높다. 약 30% 정도가 The U 교육을 다시 찾는다고 한다.

교육 주제는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지만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된다. 첫 번째 예는 화재, 뇌졸중, 호흡곤란 등 응급 의료 상황에 대처하기이다. 특히 이런 교육은 응급 상황 대처 기술을 배울 뿐 아니라, 서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어 참여자 간 친밀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예는 시끄러운 이웃에 대처하는 법이다. 길을 막고 무리 지어 지나가는 학생들의 속내 이해하기 등 이웃과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들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소위 ‘이웃들과 말문 트는 방법 (How To Talk To People)’에 대해 다룬다.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지만 너



무 기본적이라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스킬들에 대해 배우는 거다.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방법, 협상 및 설득의 기술 등 난이도가 높은 커뮤니케이션 교육들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교육은 찾아보기 힘든 게 사실이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전문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이 하루 정도 교육을 받고 촉진자(Facilitator)로 참여한다. 학생과 선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배운다는 콘셉트이고, 전문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습자 중 약 10% 정도가 자원봉사자로 다시 교육에 참여한다고 한다.

소소한 것들이 차이를 만든다.

The U 프로젝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시민 참여 활성화 노력의 필요성이나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Civic Core의 중요성을 폄하하고자 함은 아니다. Civic core의 필요성과 더불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약한유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일 뿐이다. 가끔 우리는 지역 사회의 소위 우선순위가 높은, 중요한 이슈에 몰두한 나머지, 기본적으로 지켜가야 할 소소한 것들을 소홀히 할 때가 있다. 자원봉사, 주민참여예산(Participatory Budgeting),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등 적극적 지역사회 참여가 어렵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활동은 목적이나 활동 계획 등이 구체적인 편이라 참여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나 역할도 명확한 편이다. 하지만 이웃들의 존재를 인식하기, 이웃들과 눈인사 나누기, 이웃들과 말문 트기 등은 사소한 것일 수는 있지만 일상적으로 항상 실천한다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The U의 교육 프로그램이 쉽고, 재미있다고 해서 가벼이 여길 내용은 아니다. 결정적 차이를 만드는 것은 때로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이다.

2. 독일의 계속교육

1) 독일 시민은 공부 중

독일은 학교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부러워할만한 나라가 아닐지도 모른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ISA에서 턱없이 부진한 성적을 보였으며, 통일 후 국가의 지원감소로 인해 각 학교들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PISA의 결과에 충격을 받은 독일정부가 교육개혁의 칼을 뽑아 들긴 했지만, 급격한 제도 변화에 대한 현장의 반대 역시 만만치 않아서 무척 어수선한 상태이다. 그런데도 현실에서 독일이라는 나라의 경쟁력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유럽 전역에 몰아닥친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홀로 위풍당당하다. 무엇 때문일까? 나는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학교 밖에서 계속되는 교육, 즉 평생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한다². 끊임없이 배우고 고민하는 시민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더 나은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활동적인 삶을 이루는 근본 활동으로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를 꼽았다. 노동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이며, 작업은 노동과는 별개로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구조물을 창조하는 것이고, 행위는 정치적 조직체를 건설하고 보존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다. 아렌트는 근대사회에서 사람들이 노동하는 동물이 되어가고, 인간의 활동이 오직 노동으로만 수렴되는 경향을 경계했다. 굳이 철학적 설명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일에 매몰되어 취미생활도, 시민으로서 정치참여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허무하게 느끼게 되고, 그들의 공동체 역시 피폐해질 수밖에 없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노동, 작업, 행위가 균형을 이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 것이다. 이런 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것이 평생교육이다.

독일 사람들은 졸업한 후에도 입시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공부한다. 독일인들은 지하철 안에서,

2 독일에서는 평생교육을 '계속교육(Weiterbildung)' 또는 '성인교육(Erwachsenenbildung)'이라고 부른다.

카페에서, 거리의 벤치나 공원에서 신문과 책을 읽으며 일상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찾는다. 또 전국의 시민대학들에서는 연중 헤아리기 힘들 만큼 많은 수의 강의가 개설된다. 왜 그런 것일까? 독일의 대표적인 평생교육기관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독일 시민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독일사회의 저력에 대해서 살펴보자.

여유만만 독일사회

교과부의 발표를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OECD 회원국의 평균인 40.8%에 훨씬 못 미치는 30.5%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로 시간이나 돈이 없거나 가까운 곳에 적당한 시설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람이 무언가를 배우려면 우선 여유가 있어야 한다.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그리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의무교육을 모두 마친 성인의 경우에는 이런 여유가 더욱 중요하다. 내가 본 독일사회는 시민에게 이런 여유를 제공해 주는 사회이다.

독일 시민은 많은 권리를 누리고 산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자녀수당과 보육비를 지원해 주고, 대학교육까지 무료로 제공해 주고, 병이 들면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 준다. 일터에서도 그들은 매년 6주 이상의 휴가를 보장받고, 경영자들과 영업시간, 일시휴업, 노동자 해고 등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직장협의회라는 조직을 통해 협상을 할 수 있다. 더욱 놀랍게도 독일에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감독)이사회에 노동자대표와 경영자가 동수로 참여하는 노사공동결정제도라는 것이 있다. 물론 이런 제도들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결정만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노사공동결정제도는 직원이 2천 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경영자들을 견제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며, 노동자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주요한 결정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준다. 또한 독일은 유럽의 모든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근로자의 해고보호규율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일의 직장인들은 퇴근할 때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노동자들은 임금협상을 포함한 그들의 권익을 위해 나서주는 막강한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독일의 노동자들은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고 충분한 휴식을 누린다. 그 밖에도 독일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더라도 실업수당과 기초복지수당 등을 통해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촘촘하게 짜인 사회안전망 속에서 사람들은 여유를 갖게 된다.

여유는 그들의 삶 곳곳에서 배어난다. 그들은 해마다 6~8월이 되면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가까이 별이 좋은 곳을 찾아 휴가를 떠난다. 물론 나머지 휴가 일정도 공휴일, 샌드위치 휴일에 덧붙여서 연중 틈틈이 즐긴다³. IKEA에서 조립식 가구를 사다가 조립하는 것을 즐기고, 여러 달에 걸쳐 퇴근 후 집수리를 하기도 하며, 집으로 손님을 초대해서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는 일도 즐긴다. 소규모 별장형 농장인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을 가꾸느라 큰 몸집을 부지런히 움직이기도 한다⁴. 그들은 이렇게 번거롭고 불편하게 살 수 있는 여유를 누린다. 물론 여유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두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유가 그들에게 공부를 또는 그 밖의 무엇인가를 '선택할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만은 분명하다.

엮어지면 코 닿는 곳에 있는 도서관과 스포츠클럽

독일 사람들은 공공도서관을 일상적으로 애용한다. 그곳에서 숙제를 하기도 하고, 소설책을 읽기도 하고, 음악이나 영화를 감상하며 쉬기도 한다. 도서관의 도서대출(반납)코너는 늘 사람들로 북적인다.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의 연령층도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우리에게 도서관이 시험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나를 외부와 단절시키기 위해 찾는 닫힌 공간이라면, 독일 사람들에게 도서관은 일상 속에서 새로운 세계와 그들을 연결시켜 주는 열린 공간이다. 독일에는 이런 공공도서관들이 동네마다 촘촘히 들어서 있다. 독일에는 총 8,256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이는 주민 9,902명당 1개의 도서관이 있다는 뜻이다. 독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도서관을 지적에 두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공공도서관들 덕분에 시민들은 돈 걱정 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책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들을 맘껏 이용할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독일의 출판사들 역시 공공도서관들이 안정적으로 도서를 구입해 주는 덕분에 양질의 책들을 큰 위험부담 없이 꾸준히 발간할 수 있게 된다. 시민들을 지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공간이자 과도한 상업화의 논리로부터 시민들의 지성을 지켜주는 든든한 요새인 독일의 공공도서관은 평생교육이라는 나무가 자라기에 더 없이 좋은 토양이다.

3 2010년 현재 독일의 노동시간은 연간 1408시간이고, 우리나라는 2193시간이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775시간이다. OECD 회원국들 가운데 독일은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짧은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칠레보다도 노동시간이 긴, 최장시간 노동 국가이다. (출처: OECD Statistics)

4 '작은 농장'이라는 뜻의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은 텃밭이 딸린 소규모 별장형 농장이다. 이는 주말농장의 시초이기도 하다. 독일에는 전국적으로 클라인가르텐 단지마다 협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그 수는 약 15,000개 소에 이르고, 회원 수는 약 120만 명에 달한다. 회원 1인당 관리하는 클라인가르텐의 면적은 250~300m² 정도이며, 1/3이상의 면적에 과일이나 채소를 심어야 하고, 1/3 이내의 규모로 집을 지을 수 있으며, 1/3이상에는 의무적으로 꽃을 키우도록 하고 있다.



독일 공공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베퉀시장 모습 (출처 : 오마이뉴스)

■ 주요 국가별 도서관 수, 1관당 인구수

(단위 : 개관/명/권)

구분	도서관 수	인구수	1관당 인구수	기준 연도
한국	759	50,515,666	66,556	2010
미국	9,221	302,864,000	32,845	2008
영국	4,517	61,380,700	13,589	2008~2009
독일	8,256	81,750,000	9,902	2010
일본	3,196	128,056,026	40,068	2010

(자료출처 : e-나라지표/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문화체육관광)

독일은 또한 자타가 공인하는 생활스포츠 선진국이다. 이런 독일의 생활스포츠를 견인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클럽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약 9만 개의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다. 스포츠클럽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익적인 성격의 조직으로 7명 이상의 회원만 확보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정부는 클럽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그 밖에도 운동시설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스포츠클럽들은 상업스포츠 시설



에 비해 훨씬 저렴하며⁵, 매우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전국에 고루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 살건 소도시에 살건 접근이 용이하다. 이런 장점들 덕분에 독일 인구의 약 1/3 가량이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한다. 즉 독일 사람들은 몸에서 적신호를 보내야 비로소 시작하는 절박한 치료목적의 운동이나 여름철 비키니를 입기 위한벼락치기 운동 대신, 생활의 활력과 즐거움을 위한 생활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이런 성과를 얻기까지 독일정부는 이른바 ‘황금계획(Goldener Plan)’이라고 하는 스포츠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투자했다. 이 황금계획은 독일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10분 거리 이내에서 스포츠포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 1961년 이후 꾸준히 투자가 이루어진 덕분에 오늘날 독일에서는 구 동독지역의 소도시들에서도 잔디구장과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시민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책임지고 있는 스포츠클럽은 공공도서관과 함께 독일 평생교육의 훌륭한 바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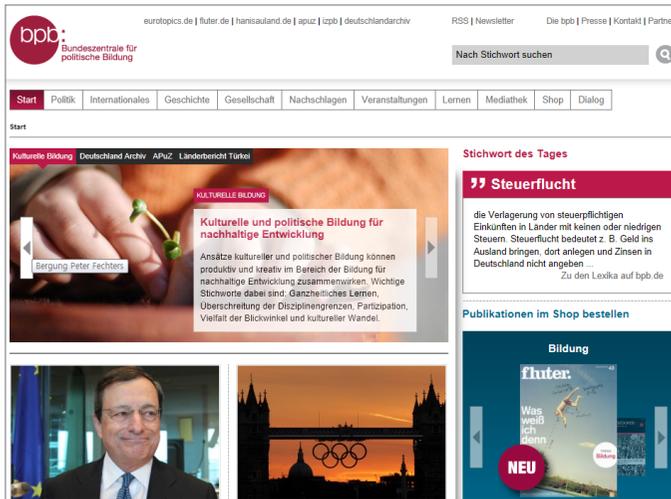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교육의 폭은 주부들이 주요 수강생인 문화센터의 취미교실에서부터, 성인들이 자신의 지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또는 자아실현을 위해 듣는 다양한 교양강좌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다. 평생교육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직업교육이다. 직장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발전하는 기술에 발맞추기 위해서 외국어를 배우거나 업무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독일의 역사, 문화, 사상 등을 잘 드러내 주는 기관과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해 독일사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는 내일의 모습을 어렵듯하게나마 짐작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 함께하는 정치교육, 국가는 거들 뿐

독일의 대표적인 정치교육 지원기관인 연방정치교육원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이 올해로 설립 60주년을 맞았다⁶.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참패한 후 독일에게는 전범국이자 패전국이라는 이중의 멍에가 씌워졌다. 패전 후 독일인들을 절망하게 만들었던 것은 잿더미가 된 국토뿐

5 예를 들어, 대도시 소재의 피트니스 스튜디오의 경우, 월 80~100유로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지만, 스포츠클럽의 경우, 성인의 평균 월 회비는 7.5유로로서 이는 독일 노동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인 8유로 보다 적은 금액이다. 청소년은 4.5유로, 어린이는 3.5유로, 가족 단위로는 14유로의 월회비를 지불한다. (송형석, <독일의 생활체육 육성 정책과 스포츠클럽>, FES-Information-Series, 2009)

6 연방정치교육원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주(州)차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정치교육원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이 별도로 존재한다.



독일연방정치교육원 사이트
<http://www.bpb.de>

만이 아니었다. 1백만 명이 넘는 강제노동자와 전쟁포로들을 죽이고, 6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정권의 만행은 양심적인 독일인들에게 또는 독일인들의 양심에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로 남았다. 종전 후 나치즘의 최면에서 깨어난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침묵과 동의,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전쟁범죄의 참상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런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신의 이성과 양심에 따라 불의한 정치에 항거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에 독일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국민들의 민주의식과 정치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 사업을 시작했으며, 그 결과로 1952년 내무부 산하 연방정치교육원이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지난 60년 동안 약 400여 개에 이르는 공인된 교육기관, 정치재단, NGO 등의 정치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다양성이 지켜주는 중립성

‘정치교육’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는 국가기관이나 어용단체의 정책선전이나 이념색 짙은 단체들의 선동을 먼저 떠올린다⁷.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식의 반공교육과 억압적인 독재정권,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의 안보교육을 기억하는 우리들에게 정부 산하의 정치교육기관이란 국가의 꼭두각시로 의심받기 쉽다. 더구나 나치즘과 히틀러를 탄생시킨 독일이 아닌가? 이런 정당한 의구심에 답하기 위해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이 국가의 선전도구로 전락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7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인상 때문에 정치교육보다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칭이 더 널리 쓰이고 있다.

우선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원기관이다. 이 기관은 매년 연방예산으로 수백 개의 단체들을 지원하지만, 각 기관의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⁸. 지원기관이 지켜야 할 조건은 첫째, 보이텔스바흐 협약Beutelsbach Konsens을 준수하는 것, 둘째, 모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지원을 받는 단체들은 이 조건을 준수하는 한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성향을 따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독일에서 정치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노조, 교회, 정치재단, NGO 등이며, 연방정치교육원은 사회 전반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교육에 반영되도록 장려하는 조율자와 지원자의 역할을 한다.

독일 정치교육의 최소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1976년 가을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각 정파들이 모여서 수차례의 회의를 거듭한 결과 얻어진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교육에서는 교화 및 주입식 교육을 금지한다. 즉 어떤 경우에도 학생에게 가르치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둘째,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은 교실에서도 논쟁 중인 것으로 소개해야 한다.

셋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당면한 정치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자율적으로 자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76년에 합의된 이 협약은 서로 다른 주체들이 공존하기 위한 원칙이며, 그러므로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주장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연방정치교육원의 중립성은 정치적으로 결코 중립적이지 않은 노조, 정치재단, 교회, NGO들을 지원하여 정치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함으로써 지켜진다. 예를 들어, 정당과 노선을 같이 하는 정치재단들은 각 정당의 국회 내 의석수에 비례하는 자금을 지원받아 정치교육을 실시한다⁹.

8 2009년 연방정치교육원의 예산은 3,840만 유로(한화 기준 약 540억 원)이었다.

9 정치재단의 경우 각자의 정당들로부터 일정하게 독립성을 갖고 있다. 당 지도부가 재단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단의 역할과 활동영역, 당의 역할과 활동영역은 명백하게 분리되어 있다. 대표적인 정당과 정치재단을 연결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시민당SPD / 프리드리히 에버츠재단 Friedrich-Erberts-Stiftung, 녹색당Grüne / 하인리히 뵐 재단Heinrich-Böll-Stiftung, 기민련CDU / 콘라드 아데나우어 재단Konrad-Adenauer-Stiftung.

이러한 제도 덕분에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수와 정당의 정당재단들까지도 국내외에 수십여 개의 지부를 운영하면서 유의미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조성된 공존과 경쟁의 환경 속에서 독일의 민주주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연방정치교육원의 이러한 운영방식은 독일의 중요한 사회운영원리 중 하나인 '보충성의 원칙 Subsidiaritätsprinzip'에 따른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이란 시민단체나 교회공동체 등이 사회의 하부단위에서 행하는 일을 국가와 상부단위에서 중복해서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대신 이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아래로부터의 시민참여,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등에 대한 독일식 해답을 제시해 준다. 이러한 원칙은 또한 국가의 최소단위인 국민 개개인의 자기결정능력과 자기책임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능력과 책임감을 강화한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또한 갖추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기구가 교육관련 기본내용을 결정하는 전문위원회와 교육원 사업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독하는 감독 위원회이다. 이들의 결정이나 감독의 기준이 되는 것은 역시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다.

많이 알려진 사업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연방정치교육원의 사업 가운데 주목하고 있는 사업은 총서발간 사업이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역사, 정치, 경제, 사회, 환경,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여 매년 약 80권의 새로운 단행본을 발간해 일반시민들에게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이런 단행본들을 연방정치교육원에서 자체 제작하기도 하고 기존에 출판된 책의 판권을 사들여 재출판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예를 들어 일반 서점에서 20유로 정도 하는 책을 이곳에서는 4.5유로에 살 수 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했던 유학생 시절, 이 제도의 덕을 톡톡히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 사업은 비록 성과를 눈으로 확인하기도 어렵고 지속적으로 비용이 투입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이 되기 십상이지만, 동시에 대중이 양서 속에 담긴 교양과 정보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일이며 정치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길이기도 하다.

스스로 배우는 정치교육

우리의 평생교육 가운데 아직은 다소 취약한 분야가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 즉 정치교육이다. 여기서 시민이란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공적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를 말하는데, 이러한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정치교육의 본령이다. 시민이란 자신이 속한 사회의 현실을 다각도로 이해하면서 삶 속의 구체적인 과제들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숙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시민을 길러내는 정치교육은 매우 포괄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들이 충돌하고 조율되는 과정 자체가 정치교육이며,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개인, 마을, 사회, 국가의 문화와 구조까지도 바꾸는 것이 정치교육이다. 이런 정치교육은 정부의 특정부처가 도맡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는 독일의 사례가 보여 주듯이 시민들이 배움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저 여건을 만들고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의 지원시스템은 정치교육의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현실에 적용한 성공적 사례이다. 이런 지원시스템 덕분에 독일의 정치교육분야에서는 개인이나 민간단체들의 열정이나 희생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정치교육분야와는 달리, 훨씬 효과적으로 정보와 인적자원이 네트워크되며 축적되고 전수되고 있다.

베를린 시내 중심가에서 우리는 낯선 풍경을 만나게 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을 당해 부서진 카이저빌헬름기념교회Kaiser Wilhelm Gedächtniskirche가 파괴된 모습 그대로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 교회는 독일인들이 자신이 일으킨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성찰하기 위해 남겨둔 일종의 경고기념물이다. 이러한 경고기념물들은 독일 곳곳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이 과거에 그 만큼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역사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독일인들은 그들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고 끈질기리만치 기억하고 성찰한다. 연방 정치교육의 출발점이자 지속의 동력이 되어준 이런 독일인들의 태도는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잊고 앞만 향해 내달리는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듯하다.

3) 독일사회의 교육안전망 ‘시민대학’

공부에는 때가 있다는 말에 익숙하고, 어딜 가나 비슷한 또래의 비슷한 배경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배우는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 나이도, 피부색도, 언어도, 학력도, 경제력도 모두가 제각각인 학생과 선생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독일 시민대학Volkshochschule의 풍경이 낯설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

시민대학은 독일의 평생교육기관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공적 교육기관이자 지역평생교육의 중심이다. 독일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시민대학의 시초는 1844년 덴마크의 시인이자 역사학자인 N. F. 그룬트비Nikolai Frederik Severin Grundtvig가 설립한 시민대학folkehøjskole이다.



교사들이 참여한 뮌헨 시민대학의 이미지 광고. 매우 다양한 개성을 가진 교사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룬트비는 시민들이 당시에 처음으로 부여받은 민주적 참여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런 신념에 기초해 경제적 장벽이나 선발시험제도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성인들을 위한 교육기관인 시민대학folkehøjskoler을 세웠다¹⁰.

독일에서 시민대학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시도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이지만, 대부분의 시민대학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교육 소외계층에게 좀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독일에 분 ‘시민대학 열풍’ 덕분에 1918/19년 예나Jena에 세워진 한 시민대학에는 개교한 지 하루만에 2천 명의 학생이 몰리기도 했다.

현재 독일에는 938개의 시민대학(3072개 지부)이 운영되고 있다¹¹. 시민들은 이곳에서 일반 교육 기관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시민대학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재정의 약 60%에 해당하는 공적지원금을 받아서 수강생들이 재정의 약 40%만을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¹². 시민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누구든지 관심 가는 강

10 이 세계 최초의 시민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덴마크의 농촌청년들은 패전에 따른 농업위기를 극복하여 세계적 농업국, 평화적인 문화국가 건설의 기초를 이룩하였다.

11 2010년 독일시민대학협회Deutsche Volkshochschul-Verband 자료기준. (www.dw-vhs.de/vhs/geschichte.html)

12 지자체와 주주의 지원금: 약 40%, 연방과 EU차원의 지원금: 약 20%. 기업의 후원금도 증가하는 추세임.

좌를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다양하다. 철자법이나 단순한 셈법과 같은 기초교육 강좌부터, 바퀴벌레 퇴치법, 청소하는 법 등 생활강좌, 외국어강좌, 그리고 하버마스나 데리다의 철학 강좌까지 매우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독일의 시민대학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뮌헨시민대학에서는 연간 약 1만 4천 개의 강좌가 개설된다. 실제로 개설 강좌의 수가 연간 1만 4천 개라고 하면, 강좌 수에서는 이와 비교할 만한 교육기관을 찾기 힘든 수준이다. 뮌헨시민대학은 약234명의 상근인력(교육인력 100명, 행정인력 134명)을 확보하고 있으며¹³ 강사진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다¹⁴.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뮌헨 시민대학 상근인력의 약 9%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인데, 이는 시민대학이 스스로 표방하는 사회통합의 이념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시민대학에서 일반시민들은 취미생활을 즐기고 교양을 쌓고, 직장인들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실직자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만학도들은 학력이수강좌를 듣는다. 이런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시민대학은 정치·사회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예를 들어, 세계화와 유럽통합이 진전되면서 이주 외국인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는 독일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위해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좌를 제공하고,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나 이민자들에게 큰 비용부담 없이 독일어 강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 밖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하는데, 최근 뮌헨시민대학은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인 뮌헨 필하모니와 공동으로 파일럿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대학에서 독일어 수업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이 뮌헨 필하모니의 연주를 함께 감상한 후 그들이 느낀 것에 대해 필하모니 연주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필하모니가 연주하는 바흐나 말러의 음악은 말하기 연습의 훌륭한 소재이기도 하지만, 외국인 학생들과 독일문화를 이어주는 가교가 되기도 한다. 도시통합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 프로젝트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서 뮌헨시민대학 측은 앞으로 다양한 문화기관들과 협력해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독일의 시민대학은 지식

13 일반적으로 시민대학 강좌의 대부분은 외부 초빙강사가 진행한다.

14 한 일간지에 따르면, 뮌헨 시민대학 학생들 1,540명에게 설문을 한 결과, 약90%가 강사들이 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답했으며, 85%가 강사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고 답했고, 그 밖에도 약86%에 이르는 학생들이 강사들이 수업준비를 성실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출처: Süddeutsche Zeitung, 2011년 5월14일자 기사)

습득과 기술연마라는 ‘교육적 과업’과 사회통합과 민주적 가치 함양이라는 ‘사회적 과업’을 두 축으로 삼아 움직이고 있다.

인간, 사회, 정치	정치와 사회, 경제와 금융, 도시계획, 자연과학, 철학, 세계의 종교, 심리학과 생활예술, 학습과 기억, 연구 일반, 시니어 시민대학
문화, 예술, 창의성	시각 갤러리, 문학과 영화, 어휘와 텍스트 – 작문, 연극, 음악, 춤, 예술사와 문화사, 박물관 안의 뮌헨시민대학, 여행 속 뮌헨시민대학-학습여행 프로그램, 회화, 조형, 공예, 유행과 의상디자인, 사진과 비디오
건강과 환경	건강정보, 건강활동, 시니어를 위한 건강활동, 요리문화와 와인, 환경과 생태학
외국어	영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기타 외국어(한국어 포함)
직업교육과 컴퓨터 활용	기업체 계속교육, 경영능력과 영업능력, 화법, 의사소통, 리더십, 문서작성 기술, 컴퓨터 활용,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성인교육의 교수법과 방법론
기초교육과 중등교과이수	철자교육과 기초교육, 중등교과이수, 청소년사회봉사와 과도기관리(학교수업 병행과정), 청소년을 위한 시민대학
독일어, 이민과 통합	외국어로써 독일어, 두 번째 모국어로써 독일어, 통합프로그램
가로지르기 프로그램	도시의 동서남북, 장애인을 위한 교육

뮌헨시민대학(www.mvhs.de)의 강좌 분류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

독일 시민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방성이다. 시민대학은 모든 사람에게, 즉 어떤 사회계층에 속해 있는지, 수입이 얼마인지, 어떤 환경적, 문화적 배경을 가졌는지 등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열려있다. 따라서 시민대학에서는 서로 다른 또는 적대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도 만남의 기회를 가지는데, 이런 만남이 서로 상대를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시민대학은 누구나 집과 가까운 곳에서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리장벽을 없애고, 수업료를 저렴하게 책정함으로써 경제적 진입장벽을 낮춘다. 그 덕분에 사람들은 누구나 배움이 필요한 삶의 순간에 시민대학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시민대학은 특히 기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거나 아예 받지 못한 사람들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데 큰 기여를 한다. 독일 시민대학의 이런 개방성은 시민들이 (평생)교육의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독일사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다시 이런 개방적인 시민대학은 독일사회를 지켜주는 교육안정망이 되어주고 있다.

모든 지역을 위한 교육

시민대학은 전국 어디에서나 찾아 볼 수 있다. 방방곡곡에 그물망처럼 퍼져있는 약 1천 개의 시민대

학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역연계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실제로 시골지역에서는 시민대학이 현지에 있는 유일한 평생교육기관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은 시민대학이 독일전역에 기본적인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시민대학은 이렇게 지역 밀착적인 동시에 매우 국제적이다. 시민대학의 강좌에 참여하는 다수의 외국인 또는 이민자 수강생들과 강사진들은 시민대학에 다문화적인 성격을 부여한다. 또한 시민대학은 도시 간 자매결연, EU-프로젝트, 또는 상위조직의 업무를 통해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시민대학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또는 지역에 있는 다양한 파트너 단체들과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들 간 접촉의 기회를 열어준다. 이렇게 시민대학은 시민들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돕는 교육기관인 동시에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시민대학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교육환경을 풍요롭게 만드는 동시에 지역의 잠재력을 북돋아주고 있다.

독일 시민대학의 사례를 살펴보면 평생교육의 목표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만 있지 않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진정한 사회의 변화는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 하나하나가 변화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시민대학과 같은 평생교육기관은 사회의 백년대계와 함께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4) 닳은 듯 다른 평생교육지원제도

우리는 모두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서 일하고, 지역에서 생활하고 소비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은 평생교육의 수요자들에게 적합한 혁신적 교육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하기에 적절한 단위라고 할 수 있다¹⁵. 특히 지방자치의 역사와 전통이 깊어서 고유의 경제적·문화적 특색을 지니고 있는 독일의 지역들은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도 비교적 독자적인 정책 결정과 수행의 단위가 되고 있다.

지역의 평생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단체와 기관들이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학습하는 지역들Lernende Regionen’을 중심으로 독일의 평생교육지원제도를 소개한다.

15 독일의 일반교육은 연방정부의 소관이 아니라 16개 주정부의 독자적 결정과 책임 아래 운영된다. 그러므로 각 교과목의 도입 시기와 교과서의 종류 등의 제반 교육행정이 주정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초등학교의 교육 기간도 14개 주에서는 4년,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는 6년이다.



독일 전역에 흩어져 있는 76개의 ‘학습하는 지역들’

학습하는 지역들¹⁶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교육과정의 개발과 피교육자에게 실제로 유용한 직업능력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의 개발은 한 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다양한 영역의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각자의 경험을 가지고 네트워킹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런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이 지역의 특색에 맞고 꼭 필요한 혁신적 교육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학습하는 지역들’ 프로그램의 목표이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의 연방연구부가 1억 3천만 유로의 예산을 책정해 2001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진행한 독일역사상 최대의 평생교육 사업이다. 현재 독일 전역에는 76개의 학습하는 지역들 네트워크가 산재해 있다(위의 그림). 지원받는 예산의 규모가 엄청난 만큼 각 네트워크들의 정부예산에 대한 의존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연방과 주정부의 재정지원이 단계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또한 한번 결성된 네트워크들이 정부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되어 지역의 평생교육 공급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이들 중 상당수는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재단이나 사단법인 또는 공익유한회사gemeinnützige GmbH의 형태로 탈바꿈했다¹⁷. 이처럼 독일정부는

16 ‘학습하는 지역들’ <http://www.lernende-regionen.info>

17 양대중, <독일 평생교육 정책동향>, 평생교육진흥원, 2008년 / BMBF, <Regional kooperieren für eine neue



크라일스하임에 있는 직업학교에서 열린 '기술직 여성들' 홍보의 날에 학교를 방문한 여성들이 학교의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안내를 받고 있다.

평생교육정책에 있어서 철저히 중앙보다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상하고, 주도하기보다는 지원하는 데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있다.

여기에서 잠시 학습하는 지역들 프로그램의 취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를 살펴보자. 슈베비쉬 할 Schwäbisch Hall과 안스바흐Ansbach 지역에서 조직된 '기술직 여성들Frauen in Technikberufe'이라는 네트워크는 평생교육을 통한 과도기 매니지먼트의 사례이다¹⁸. 이 두 지역은 제조업이 강세인 지역인데 반해, 이 지역의 여성들은 대부분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결혼이나 육아로 인해 일을 쉬었다가 일자리로 돌아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기술에 대한 지식이 있는 판매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컸다. 이런 수요공급의 불균형 상황에 착안한 '기술직 여성들' 네트워크는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이 지역의 제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 네트워크는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민의 숨은 능력을 개발해 주고 인생의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한 사례이다. 이 네트워크에는 지방 노동청, 교육기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데 두 지역의 노동청은 중소기업들과 관련 교육기관들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고 협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들은 필요한 교육과정 설계에 참여하며, 직업교육 센터나 기술전문대학들은 여성들의 교육을 직접 담당한다.

이처럼 학습하는 지역들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노동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Bildung in Deutschland), 2008년

18 <http://www.lernenderegion.net/arbeitsgruppen/detail.php?id=14>

이다. 그것은 학습하는 지역들 프로그램이 기존의 전통적 교육 시스템을 따르기 보다 지역 노동시장의 필요에 맞춰 교육의 공급을 개선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역 노동시장 관계자와 교육 관계자의 소통을 통해서 실질적인 고용촉진을 이룬 것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 덕분에 우수한 인력 확보에 성공한 지역의 기업들은 이 후에도 평생교육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사람들의 삶의 궤적과 직업 이력은 수없이 바뀌고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의 배움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제도교육에서 끝날 수 없다. 이런 삶의 조건은 한국, 독일, 그 밖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런 변화에 적응해야 할 책임이 온전히 개인에게 떠넘겨지는지, 아니면 공동체와 사회에도 함께 부여되는지가 나라에 따라 다를 뿐이다.

‘학습하는 지역들’ 프로그램은 직업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긴 하지만, 이런 평생교육 네트워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문화사회,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떠안게 된 낯선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공존, 은퇴 후의 긴 삶에 대한 준비 등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 단위의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네트워크는 지구화Globalisierung와 지역화Regionalisierung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어서 확장성이 높고 매우 유연한 현대적 조직 형태이다. 이런 네트워크는 기존 교육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도구가 된다. 네트워크는 영역을 넘나드는 소통과 협업을 가능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평생교육 시설들¹⁹을 연결시켜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고 교육서비스의 질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 밖의 제도들: 평생교육적금Weiterbildungssparen과 평생교육대출Weiterbildungsdarlehen²⁰

우리나라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준이지만 독일 역시 국민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낮은 것을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지원금 제도의 새로운 도구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려고 한다. 이런 지원금 제도는 이미 상당수의 국가들이 실

19 독일의 평생교육은 전국적으로 약 2만 5천 개의 교육시설들에서 약 40만 개 정도의 학과나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주체별 평생교육 부담률은 기업 30%, 시민대학Volkshochschule 14%, 사설교육기관 11%, 상공·수공업회의소 5%, 직업군별 협회들과 교회 각각 4%, 대학교와 전문대학 2%, 직업아카데미 4% 등으로 나타난다. (BMBF, 〈Das 9. Weiterbildungsberichtssystem〉, 2006년)

20 <http://www.weiterbildungssparen.info>

시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지원 제도이다. 그러나 독일정부가 추가로 마련한 제도들은 독일이 ‘기초’ 또는 ‘최소한’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래서 또한 우리 사회의 발걸음을 재촉한다.

우선 평생교육적금은 적금 해약 없이 적립금을 평생교육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보통 독일의 적금은 7년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만기 시에 높은 만기이자를 받게 되어 있다. 평생교육 적금제도는 이 만기이자 보너스를 그대로 받으면서 기존 적립액을 계속 교육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제도를 통해 직장인들은 직장인우대적금을 자신의 교육비로 십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교육비용의 50%를 부담해 주는 보조금Prämiengutschein제도와 함께 직장인들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음은 평생교육대출 제도이다. 이것은 평생교육비용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이 대출 제도는 특히 고가의 평생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사람들은 이 대출금으로 교육기간 동안의 생활비와 수업에 관련된 부대비용까지 충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구매 비용이나 수강지역에서 여행 및 숙박비용 등도 교육비용으로 인정된다. 이 대출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신청자의 신용도를 제한적으로 심사한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대출을 받으려면 지정된 상담소에 가서 본인의 학습계획에 대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사는 대출금을 상품권 형태로 발급해주면서 세 군데 이상의 평생교육기관을 상품권에 기재하게 되는데, 신청자는 그 기관들 중 한 곳에서만 그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앞의 두 제도는 모두 아직 도입단계에 있어서²¹ 그 성과나 한계 등을 평가하는 것이 조금 선부르지만, 이런 제도의 도입을 통해 독일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바는 분명해 보인다. 지금까지 일반교육이나 평생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포함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약의 발판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소개한 제도들과 유사한 제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학습하는 지역들’은 ‘평생학습도시’와, 평생교육보조금 제도는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교육지원금 제도와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들의 유사함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룩한 교육복지의 제도적 성과를 의미

21 두 제도는 모두 2009년에 법제화되었다.

하며, 그 상이함은 사람과 사회, 세계를 보는 그들과 우리의 시각이 다름을 의미하는 듯하다.

5) 함께 살기, 서로 배우기

정치교육원과 시민대학으로 유명하고 지역중심의 학습공동체가 발달되어 있는 독일은 세계 최초로 유치원을 만든 나라이기도 하다. 영어로 유치원을 ‘킨더가튼Kindergarten’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단어가 ‘아이들의 정원’이라는 뜻의 독일어 ‘킨더가르텐Kindergarten’에서 유래했다. 평생교육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치원 타령을 하는 이유는 소개할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독일의 유치원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로 유치원을 만든 나라답게 독일의 유치원은 오늘도 한 발 앞서 진화하고 있고 그 진화의 방향은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을 짐작케 해준다. 또한 그들이 부단히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자신들이 바라는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양로원과 어린이집이 하나로?!

독일 함부르크의 한 양로원 ‘Pflegen & Wohnen Farmsen’ 건물의 주방 안은 아이들의 재잘거림과 노인들의 웃음소리로 시끌시끌하다. 다섯 살 엠마와 여든다섯 살 파울은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열심히 꺾고, 썰고, 맛보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곳에서는 백발성성한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이것저것 함께 만드는 것이 일상이다. 어찌된 일일까? 이 모든 일은 2년 전, 이 양로원 건물로 어린이집이 이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의 절묘한 동거는 최근 독일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곳에서는 약 150명의 아이들과 200명의 노인들이 함께 보살핌을 받고 있다. 양로원과 어린이집의 조합이라니 무척 낯설게 들리지만, 기실 이것은 과거 대가족 안에 있던 우리 삶의 모습과 무척 닮아 있다. 그들은 상대에게 줄 것을 참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 아이들의 끊임없는 호기심과 재잘거림은 노인들의 단조로운 무채색 일상에 다채로운 색을 입혀준다. 노인들은 아이들과 맺는 관계를 통해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얻고 웃음을 되찾는다. 아이들 역시 집에서 만나기 힘든 다른 세대와의 어울림을 통해 노인에 대한 또는 약한 존재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게 된다. 이런 관계 속에서 아이들은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파울 할아버지가 떨어뜨린 숟가락을 집어주고 앞장서서 문을 열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까지 함께 배운다.

독일 전역에 12개의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Pflegen & Wohnen Farmsen’ (이하 P&W)은 이런



'Pflegen & Wohnen Farmsen' 을 소개하는 독일의 뉴스 동영상의 한 장면

양로원과 어린이집 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좋고 수요도 늘고 있어서 아직 아이들이 없는 나머지 여덟 개의 요양시설에도 곧 어린이집의 입주가능성을 타진해 볼 예정이라고 한다. P&W가 독일 내의 세대통합 돌봄 프로그램의 선두주자 격이기는 하지만 그 밖의 다양한 기관들도 최근에 이와 유사한 시도들을 독일 곳곳에서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통합유치원 Integrationskindergarten

독일의 통합유치원에서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장애가 없는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뛰어 논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함께 노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고, 각자 이름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장애가 있고 없음 역시 여러 가지 차이 가운데 하나일 뿐임을 깨닫게 된다. 처음에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다르고 낮은 행동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울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특성을 알게 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어울리게 되는데, 이것은 결코 일반 유치원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함께 어울려 본 아이들은 장애가 있건 없건 간에 서로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통합유치원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 때문에 학습 진도가 전체적으로 느려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런 우려는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이지 통합유치원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아니다. 과거 나의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한 학급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했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놀림의 대상이거나 동정의 대상인 경우가 많았다. 마치 우리의 일상에 불쑥 끼어든 이방인 같았던 그 아이들은 존재감도 힘도 미미했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그저 학급의 책상 한 개를 내어 주었을 뿐,



뮌헨의 한 통합유치원 수업시간

그 아이들과의 통합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의 일상에 일방적으로 적응해야 한다.

독일 통합유치원의 모습은 내 기억 속의 유치원이나 학교와는 사뭇 달라 보인다. 우선, 통합유치원의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비율은 대략 1:2정도이며, 각 반에는 이들을 돕는 특수교육 전공교사가 추가로 배치되어 있다. 또한 통합유치원은 부분적인 분리수업, 전문 인력 투입, 통합교육에 적합한 커리큘럼 개발 등을 통해 아이들의 통합을 지원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뮌헨에 있는 한 통합유치원의 경우는 한 반의 학생 수를 15명으로 규정해 25명이 있는 인근의 일반유치원보다 적게 유지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사와 음악치료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시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를 위해 아이의 부모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70유로(한화로 약 11만 원) 정도를 내는데 장애아를 가진 경우에는 이마저도 시에서 보조해준다. 이런 환경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나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나 모두 좀 더 자연스럽게 서로를 일상을 공유하는 친구로 받아들일게 된다. 물론 이곳에서도 아이들은 서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최소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응이 강요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장애가 없는 아이들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적응하는 일이 훨씬 많다. 독일에서는 일반유치원에 비해 더 좋은 교육여건 덕분에 통합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려는 비장애아 부모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 EQ(감성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런데 IQ(지능지수)만을 중시하는 사회에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로 소개된 EQ라는 개념이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영

동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EQ를 검사하는 테스트가 생겨나고 아이들이 그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숫자로 표시되는 감성지수 대신에, 몸과 마음에 보이지 않게 스미는 ‘진짜’ 감수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해답도 학원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통합교육에서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학교 안의 학교 : 시니어학교 부영이Seniorenschule EULE

다음으로 소개할 사례는 유치원은 아니지만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려 배운다는 점에서 앞의 유치원들의 사례와 맥을 같이한다. ‘시니어학교 부영이’는 지난 2001년에 독일 북서부의 도시 레케Recke의 뤼어스텐베르크 고등학교Fürstenberg-Gymnasium에서 시작된 학생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교사가 되어 5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영어, 불어, 컴퓨터와 인터넷, 기억력 훈련, 문학 등을 가르친다. 이 시니어학교는 뤼어스텐베르크 고등학교의 학생과 시설을 활용한, ‘학교 안의 학교’라는 새로운 개념의 학교이다. 이런 시니어학교가 아직은 몇몇 소수의 고등학교에만 도입되어 있지만, 다른 학교의 사례에서 영감을 얻고 자극을 받은 학생들이 하나둘씩 이런 ‘학교 안의 학교’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각자 자신 있는 과목을 택하여 강좌를 담당하게 되는데,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우게 된다며 즐거워한다. 이런 ‘학생’ 교사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부딪힐 경우에는 담당과목 ‘진짜’ 교사들이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 학교에는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약 120명의 시니어학생들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시니어학교의 수업시간은 방학기간을



노트북코스 학생들에게 새 노트북 전달기념(좌) 학생식당에서 다함께 즐기는 티타임(우)

제외하고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15분까지이다. 보통 두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시간 사이의 쉬는 시간에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식당에 모여 함께 티타임을 가진다. 이 티타임은 각 반별로 순번을 정해 준비한다.

이런 시니어학교는 세대 간 대화의 장인 동시에,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노년 세대가 자신과 비슷한 관심과 성향을 가진 또래들을 만나고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또래 간 대화의 장이기도 하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참여의지를 통해 만들어지는 시니어학교는 지역사회 노인들의 삶에 활력을 더해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참여와 나눔의 기쁨을 선물해 준다. 학생들의 이런 뜻에 공감하는 테클렌부르거 란트의 가톨릭 복지회Caritasverband Tecklenburger Land가 그동안 노인 복지사업을 운영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인력을 제공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지원해주고 있다.

당장의 대학입시에 짓눌린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에게는, 또는 그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는 독일 학생들의 이런 경험담이 그저 먼 나라의 팔자 좋은 아이들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런 ‘판 짓’을 하기에는 대학입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래 전에 비슷한 과정을 겪어 본 우리들은 대부분 알고 있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시민이 수능점수와는 사실 별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연대하는 능력,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희망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닥쳐 올 미래’에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또는 남들에게 뒤쳐지지 않기 위해 전전공공하고 있다.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쩌면 단 한 스푼의 용기와 서로에 대한 믿음일 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소개한 독일의 사례들과 유사한 또는 더 훌륭한 시도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미 움트고 있다.

3.미국, 문턱 없는 학교

1) 누구라도, 언제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커뮤니티 컬리지란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은 이에 대해 많은 얘기들을 들어왔을 겁니다. 루

저 컬리지? 구제가 필요한 10대들의 학교? 아니면 고등학교를 중퇴한 20대들이 다니는 학교? 중년 이혼녀들의 학교? 혹은 생각은 열정적이지만, 영원의 배수구만을 맴뎠고 있는 노인들의 학교? 아마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 컬리지에 대해 들어온 것들이겠죠?”

- “Community” TV Show 중에서

콜로라도의 작은 타운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를 배경으로 하는 NBC의 드라마 ‘커뮤니티’의 첫 시작이다. 커뮤니티 컬리지에 대한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인상은 조금 과장을 보탠다면 ‘찌질이들의 학교?’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루저, 고등학교 중퇴자, 이혼 후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한 중년 여성, 그리고 노인들의 학교, 이 모든 공통점을 모아보면 커뮤니티 컬리지가 미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한 번의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어떤 ‘궤도’를 이탈한 사람들, 다시금 그 ‘궤도’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 그곳이 바로 커뮤니티 컬리지이다.

나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미국 북서부에 있는 오레곤 주의 그레섬이라는 작은 동네에 있는 마운틴후드 커뮤니티 컬리지(이하 MHCC)에서 공부하고, 올 9월 자연의학 대학원의 입학울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늦어지면 아예 시작도 못할 것 같아 오랫동안 꿈꾸기만 한 자연의학 공부를 위해 한국을 떠나 MHCC에서 의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일반생물학, 일반화학, 유기화학 등의 선수과목들을 이수했다²². 그리고 그 1년 반 동안 학교에서 ‘커뮤니티’라는 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던 루저, 고등학교 중퇴자, 중년의 이혼여성, 노인들을 다 만났고 그들과 함께 숙제를 붙잡고 씨름하고, 중간고사 후 서로 답을 맞춰보기도 하며, 그렇게 학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었다.

커뮤니티 컬리지가 뭐지?

커뮤니티 컬리지는 뭘까? 우리말로 커뮤니티 컬리지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야 할까? 한국의 포털사이트에서 커뮤니티 컬리지를 검색해보면 “커뮤니티 컬리지가 뭐죠?” 라는 질문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커뮤니티 컬리지는 2년제 대학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하면 전문대’라고

22 의대, 약대, 법대 등은 한국과 다르게 전문대학원으로만 존재한다. 학부를 졸업해야만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의대, 법대 등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학부에서 필요한 선수과목-의대인 경우, 일반생물학, 일반화학, 유기화학, 수학, 물리학, 심리학 등-과 학사를 받기 위해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다. 나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대학에서 한 번도 자연과학 과목들을 공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필요한 선수과목들을 수강하였다.

소개되기도 하고, 혹은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기 위한 중간교육기관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한다면 커뮤니티 컬리지에 대해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또 ‘도대체 노인들이나 중년 여성들은 왜 다니는 걸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커뮤니티 컬리지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인식체계에 접속이 안 될 정도로 낮은 이유는 한국의 교육제도에 있는 어떤 학습 기관과도 1:1로 맞아 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1년 반 동안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공부하면서 나는 커뮤니티 컬리지는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임을 알게 되었다. 커뮤니티 컬리지는 2년제 대학이자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기 위한 중간교육기관이며, 직업학교이며, 제도 교육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지역에 기반을 둔 평생학습기관이며, ‘무엇이든 가르치는’ 학교였다.

문턱 없는 학교

생각해보라, 한국에서 대학에 가는 일이 얼마나 지난하고 (그 악몽 같았던 고 3 시절을 생각해 보라), 복잡하며 (교과과정이 다르면 시험 봐야할 과목도 다르다며?)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난 아직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능을 다시 보는 꿈을 꾸다지?). 사실 한국에서 수능을 다시 보고 대학을 다시 들어갈까 생각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입시학원을 또 다닐 생각을 하니 몸서리가 쳐졌고, 원서를 쓰기 위해 다시 고등학교를 찾아가 코흘리개 시절 좋아했던 선생님을 만나야 하는 것도 견뎌내고 민망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대학입시 준비생’이라는 그 기간을 견뎌낼 수 있을지 정말 자신이 없었다. 남의 나라 말로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과목들을 공부하는 것도 역시 두려운 일이었지만, 열심히만 한다면 커뮤니티 컬리지에서는 1년 반 안에 필요한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원과 가까이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들을 고르고, 담당자와 여러 차례 메일을 주고받은 끝에 학교(MHCC)를 선택했고 입학 준비를 했다.

전체 댓글수 6 육살이나 비방 댓글은 누군가에게 문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새로고침 ↕
ㅇㅇ	커뮤니티: 전문대/컬리지: 4년제	175.211.***.***	2012.07.01 22:35	✕
후면빙	그린데일 커뮤니티 컬리지 보니까 전문대보다 더 하던데.. 노인들 다니고 수업 맘대로 듣고.	220.87.***.***	2012.07.01 22:41	✕
임요	그럼 평생교육원이야?	115.22.***.***	2012.07.01 22:44	✕
ML0BZ	그날 전문대라고 보면됨. 명문대 떨어진애들이 저기 2년동안 열심히 다니면서 학점 잘따면 3학년으로 명문대 편입도 가능해서 요즘 새 맘이들 간다고 하던데	121.135.***.***	2012.07.01 22:51	✕
ML0BZ	그리고 커뮤니티에서처럼 나이 많은신분들도 공부 하고싶으셔서 다니시는분들도 많다고 들음	121.135.***.***	2012.07.01 22:51	✕
미모연구	미드 커뮤니티 보면 알수 있짐..그린데일이 인생막장 루저들을 안받아주면 무인 머리로 가야 됩니까?	72.240.***.***	2012.07.01 23:03	✕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커뮤니티 컬리지 개념 좀...”이란 질문에 대한 답글. “그럼 평생교육원이야?”빙고

외국학생이기 때문에 공인영어성적과 재정증명, 그리고 국적에 상관없이 다 제출해야하는 예방접종증명 등 몇 가지 증명서류를 준비해 보내고 입학 허가를 받았다. 입학 허가를 받았다고 바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학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하는 평가시험 (College Placement Test, 이하 CPT)을 보고 그에 따라 수강이 가능한 과목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CPT는 영어와 수학, 두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되는 교육을 받았으면 풀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문제들이 출제된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CPT에는 정해진 마감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를 풀다가 휴식이 필요하면 시험을 중단하고 다음에 이어 볼 수도 있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한번 시험을 볼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시험 결과에 따라 들어야 할 영어 작문, 수학 수업의 레벨이 정해진다²³. 시험 성적을 받으면 어드바이저를 만나 전공 선택과 그 전공을 위해 필요한 과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학기에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등의 내용으로 상담을 하고 수강 신청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남은 일은, 개강에 맞춰 잊지 않고 수업에 들어가는 일!

이처럼 커뮤니티 컬리지는 진입 장벽 자체가 낮다. 시험의 결과는 합격/불합격이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공부해야 할 내용이 정해지므로 자신이 이해하는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찬찬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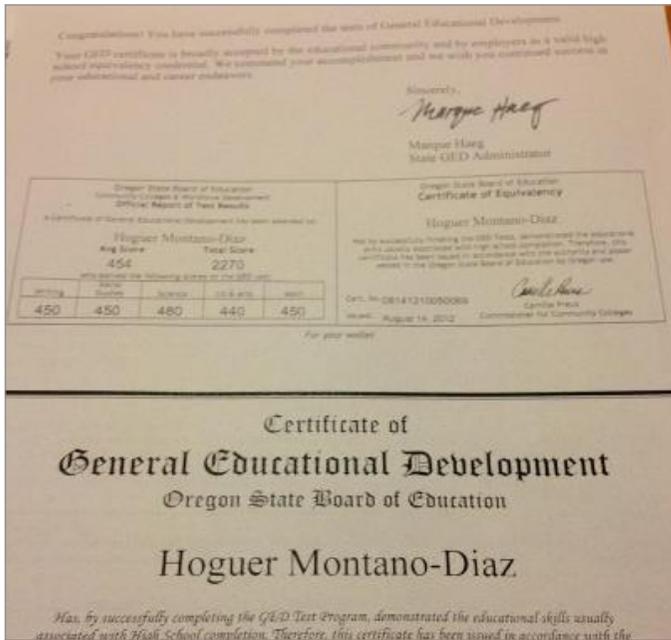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컬리지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장이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다면,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ABE(Adult Basic Education) 또는 GED (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과정을 통해 읽기, 쓰기, 수학, 과학, 사회 과목들을 배우고, 고등학교 졸업자격 시험에 해당하는 GED 시험을 볼 수 있다. 읽기, 쓰기와 수학은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할 기술 중의 하나이며, 고등학교 학위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히스패닉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로도 수업이 제공된다. 과정 이수 없이도 GED 시험을 볼 수 있으니,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라도 학교로 돌아가는 열차에 올라탈 수 있는 것이다.

여러 종류의 학생, 여러 종류의 공부

‘아무 것도 들리질 않는구나’라는 절망 속에 첫 날 수업을 마치고서 짐을 챙기며 옆에 있던 애한테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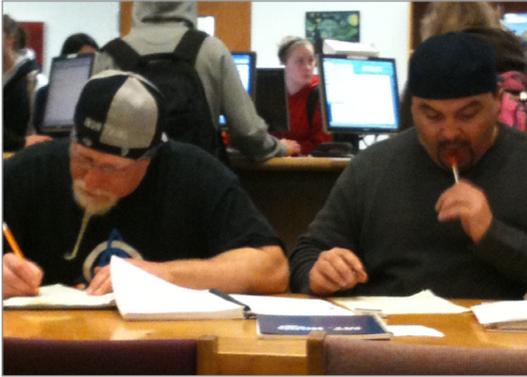
23 전공에 따라 이수해야 할 과목의 수준이 다르긴 하지만 영어 작문과 수학은 학사학위를 받기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이다.



내 친구 호게르의 GED 증명서. 멕시코 이민자인 호게르는 어릴 때 사고를 많이 치는 바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는데, 25살 때 '맘 잡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공부를 워낙 안 해 곱셈, 나눗셈마저 어려워 할 정도였는데 드디어 GED를 받았다.

을 걸었다. 그녀의 이름은 멜리사. 나이는 스물세 살. 나의 첫 친구가 되어 준 그녀는 나에게 커뮤니티 컬리지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임을 보여주었다.

그녀와 함께 학교 여기저기를 다니면 카페테리아에서 샌드위치를 만들던 아저씨도, 캐셔 언니도, 화장실을 청소하던 아줌마도 그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한다. “넌 어떻게 학교 사람들을 다 아 니?” 란 질문에 그녀는 웃으며 “내가 학교를 오래~ 다녔잖아.” 했다. 어쨌든 커뮤니티 컬리지는 ‘거 쳐 가는’ 학교이다. 빨리 마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커뮤니티 컬리지에 오래 머 물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는 4년째 커뮤니티 컬리지에 다니고 있다. 그렇다고 그녀가 게으름만 부리 며 돈만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녀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정말 하나하나씩 다 찾아 배 우고 있는 중이었다. 음악을 좋아하는 그녀는 음악 교육으로 Associate Degree를 받았고, 간호사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간호학교에 가기 위해 관련 과목을 듣다가, 간호사 대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은 검시관이 되는 거라는 걸 깨닫고 해부학, 생물학 등을 수강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틈틈이 관심 가는 분야의 수업들을 하나, 둘씩 찾아 듣는 그녀를 보며 난 ‘공부’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 각이 들었다. 무엇이 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재미있어서 하는 공부,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채워가 는 공부, 공부가 그냥 삶 자체인 공부. 무엇보다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커뮤니티 컬리지가 새롭 게 보이기 시작했다.



할리 데이비스를 타고 다니는 아저씨들. 프로 레슬러 헐크 호간을 닮아서 내가 그렇게 이름 붙여줬는데, 덩치에 안 맞게 막대 사탕을 짹짹 빨며 열공 중이다.

학교 벤치에 앉아 친구를 기다리다 이야기를 나누게 된 어떤 아줌마는 지금 특수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다.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놓아란다. 아기와 대화를 하기 위해 커뮤니티 컬리지에 수화 과정을 등록하고 배우기 시작했다. 배우다 보니 재미도 있고, 또 아이와 소통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아이와 같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공부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느 날엔 버스에서 내 옆 자리에 앉아 말을 거는 할아버지도 있었다. 그동안 도서관이랑 버스 안에서 나를 몇 번 봤다며, 무슨 과목을 듣는지, 뭘 하고 싶은지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몇 년 전에 은퇴했다는 이 할아버지는 지금 영어 작문과 수학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한다. 이유를 묻자 할아버지는 “재미로 (for fun)!”라고 대답했다. 재미로 작문 수업을 듣고, 수학 수업을 들을 수 있구나, 그렇구나. 학교생활에 조금 여유가 생겨 구석구석을 돌아보니 머리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꽤 자주 볼 수 있었다. 수학 튜터까지 구해서 수학공부를 하던 할머니, 할리 데이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니던 헐크 호간을 닮은 할아버지도 도서관에서 수학책을 잡고 씨름을 하고 있었고, 내가 듣던 삼각함수 시간에도 나이가 지긋한 아저씨가 하나 있었다. 나와 일반화학부터 그 어려운 유기화학까지 같이 들었던 친구 하나는, 화학이 그저 너무 재미있어서 듣고 있노라고 했다. 공부를 하는 이유도 동기도 각각 다르겠지만, 그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 사는 곳 가까이 있다는 게 나는 너무나 부러웠다.

내 친구 대니얼의 이야기도 해야겠다.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대학에는 왜 가야하는지, 삶에서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이런 저런 단순 노동을 하다 월마트에서 카트를 정리하는 일을 시작했다. 뜨거운 피약벌이 내리는 주차장에서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카트를 모으다가 이렇게 사는 걸 기대했던 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진 그는, 그날 점심을 먹으러 나온 후 복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좀 더 큰 도시로 떠났고 약사보조 (Pharmacy Technician)

자격증을 따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는 약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먹고, 스물 세 살에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그는 약사가 되기 위한 트랙을 차근차근히 밟고 있다.

2) 모든 것을 가르치는 학교

사람들은 커뮤니티 컬리지에 대해 백화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내가 다닌 MHCC의 프로그램을 한번 보자. ‘도대체 안 가르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커뮤니티 컬리지의 프로그램은 대개 세 가지 트랙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아카데미한 것, 또 하나는 기술적인 것, 그리고 마지막은 그 둘의 중간 정도이다.

아카데미한 프로그램의 경우 많은 이들이 4년제 종합대학에 들어가기 전 학점 이수 과정으로 많이 이용한다. 그 이유는 커뮤니티 컬리지의 공적 재정으로 운영되므로 학비가 굉장히 싸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레곤 주민의 경우 MHCC의 학비는 1학점 당 97.75불로 오레곤에서 가장 큰 도시인 포틀랜드에 있는 4년제 종합대학 포틀랜드 주립대학(Portland State University, PSU)의 1학점 당 142불보다 44불이 싸다²⁴. 그래서 정말 집에 돈이 너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은 경우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최대)2년 동안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4년제 대학으로 옮겨간다. 컬럼비아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다고 알려진 오바마 대통령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처음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지 않는가.

또 하나의 트랙은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는 것이다. MHCC의 프로그램에는 자동차 정비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고, 포틀랜드와 그 주변 지역을 커버하는 대중교통인 Trimet 정비기술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다. 또 도제 프로그램이라 하여 산학협력과 같이 특정 기업과 연계하여 학교와 기업이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해당 기업에 취업도 가능하다. 이러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은 학업 기간에 따라 학위 과정 (2년제, Associate degree)과 자격증 (1년제, Certificate)으로 나뉜다. 수업은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주말에도 열리기 때문에 체력만 받쳐준다면 주경야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마지막 트랙으로 이름에 ‘커뮤니티’를 달고 있는 만큼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역시 가

24 커뮤니티 컬지지를 비롯해 주립 대학은 주(州, state) 재정으로 운영된다. 주 재정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확보되므로, 주민이 주립 학교를 들어갈 경우 학비는 타주에 살거나 외국 학생에 비해 훨씬 싸다. MHCC의 경우 타 주에 사는 학생의 학비는 한 학점 당 216.75불, PSU는 480불이다. 외국 학생은 그 보다 30불 정도 더 비싸다.



MHCC 카탈로그

지고 있다. 컴퓨터 교육은 물론이고, 소기업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우리에게 익숙한 댄스, 요가, 기타 등의 취미 교육도 물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취미 교육의 경우 그 성격이 한국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DIY-Do it yourself, 즉 뭔가 스스로 만들고 고치는 것에 대한 교육이 많다는 것이다. 기타 교습은 어디에나 있지만 기타를 만드는 프로그램은 흔치 않다. 그래서 기타를 만드는 강좌는 나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자동차 정비 교육은 포드, GM, 도요타 등 브랜드별로 나뉘어져 있고, 디지털 카메라 강좌도 캐논 따로 니콘 따로 한다. 요가, 필라테스, 태권도 같은 생활체육 수업은 학점 인정이 되는 과목들이어서 학생들도 많이 듣는데, 이런 수업들은 학생들과 지역 주민, 다양한 연령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나의 어머니는 생물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셨다. 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기타 평생학습기관에서는 생물학 강좌를 열지 않았고, 엄마가 생물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은 대



MHCC 학교 입구. 문턱만 낮을 뿐 아니라, 교문도 담장도 없다. 모두에게 열린 커뮤니티 칼리지. 저 멀리 보이는 눈 덮인 산이 후드산이다.

학이 아니고선 찾기 힘들었다. 막연하게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문화센터의 강좌는 너무 가볍고,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는 원하는 강좌를 찾기 어렵고, 대학교의 강좌는 진입 장벽부터 너무 높다. 무슨 연구소 혹은 무슨 아카데미에서 하는 강좌들은 너무 학술적이지 않은가. 수능을 보지 않아도 대학교 수준의 강좌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생물학이 됐든, 종교학이 됐든 너무 가볍지 않고, 시작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은 그런 곳에서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삶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더욱이 취미로, 재미있어 시작한 공부가 학점으로 쌓여 나중에 학위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닌가.

숨어 있는 지식과 자원과 능력을 순환시키는 곳

커뮤니티 컬리지는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퇴한 시니어나 임신, 출산,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고학력 여성들에게도 자신의 능력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 되기도 한다. MHCC의 튜터링 센터²⁵(tutoring center)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물리 튜터, 케빈 할아버지가 있다. 영화 ‘백 투 더 퓨처’에 나오는 박사님을 닮은 그는 내가 들고 간 모든 문제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해주었다. 여러 차례 도움을 받으면서도 왜 튜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못했는데, 여하튼 그의 탁월한 물리학 지식이 커뮤니티 컬리지를 통해 순환될 수 있어 기쁠 따름이다. MHCC에서 마지막 학기에 나는 문법 수업을 들었다. 담당 선생님은 남편을 따라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경력 단절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웬만큼 자라자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작문 튜터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글을 쓰고, 글을 고치고, 문법을 설명하는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깨닫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 MHCC에서 작문 교수로 일하고 있다. 커뮤니티 컬리지는 이처럼 숨어 있는 지식과 자원, 능력을 순환시킨다. 지역 사회 안에 있지만 지역주민의 도서관 출입마저 불허하는 한국의 대학, 높다란 담장과 커다란 교문으로 자신만의 울타리를 지키는 한국의 대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미국에서 짧은 시간을 살면서 다른 건 몰라도 꼭 하나 한국으로 옮겨가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스템,

25 튜터링 제도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돕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일정 정도의 학점 평균을 유지하면 튜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들은 시간당 꽤 높은 돈을 학교로부터 받으며 정해진 시간 일을 한다. 이들에게 부과된 업무는 동료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 함께 문제를 풀거나,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튜터를 하는 학생들에게겐 훌륭한 아르바이트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공짜 과외 수업이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자격을 충족한다면 튜터가 될 수 있다.



MHCC 튜터링 센터 풍경
 (출처: <http://www.mhcc.edu/news.aspx?id=3095>)

언제나 그렇듯 ‘달콤한 열매’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지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만으로,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것만으로 이 제도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3) 마을이 학교를 키운다

“지금이 바로 더 확고하고 강력한 성장의 기초를 세울 때입니다. 이 단단한 토대는 미래에 다가올 경제 한파에도 끄떡하지 않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또 세계 경제 속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커뮤니티 컬리지를 개선하여, 모든 연령의 국민들이 미래에 경쟁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커뮤니티 컬리지에 대한 회담 (White House Summit on Community College)’ 연설 일부

오바마 대통령의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미국 교육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까닭에 한국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명문대학에 지원금을 더 주는 식이 아니라 커뮤니티 컬리지를 개선하고 육성하는 데에 상당 부분 방점이 찍혀 있다. 경제 불황 속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열려있고 누구나 접근가능하며 또 누구나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가 바로 그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2020년까지 미국이 다시 한번 가장 많은 대졸자 비율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커뮤니티 컬리지가 5백만 명의 졸업자를



2010년 열린 커뮤니티 '컬리지에 대한 회담' 에서 연설을 하는 오바마 대통령
 (출처: <http://www.whitehouse.gov/blog/2010/10/05/community-colleges-america-s-best-kept-secret>)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년간 20억의 예산을 커뮤니티 컬리지와 직업훈련에 쓰도록 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커뮤니티 컬리지를 '미국 교육 시스템의 찬양받지 못한 영웅 (Unsung heroes)' 이라 부르며 인식의 재고를 촉구했으며, 자신의 주요 연설지로 커뮤니티 컬리지를 택해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시켰다. 그리고 이즈음 커뮤니티 컬리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기사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였으니, 2009년 가을 TV 쇼 '커뮤니티'의 방영은 완전히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을 듯하다.

2012년 현재 미국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는 총 1,132개이고, 분교 형태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총 1,600개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2009년 가을 학기에 커뮤니티 컬리지에 등록한 학생은 모두 13만 명, 오바마 정부의 커뮤니티 컬리지 지원 정책에 힘입어 커뮤니티 컬리지에 등록하는 학생 수는 점점 더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다. 미국 교육 정책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

강사의 학력보다 자질이 더욱 중요

한국에서 '안정적'인 대학 시간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박사 과정 중에 있거나 수료를 해야 한다. 전임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거의 무조건, 박사학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공부하면서 한 가지 새로웠던 점은 석사 학위만으로도 전임강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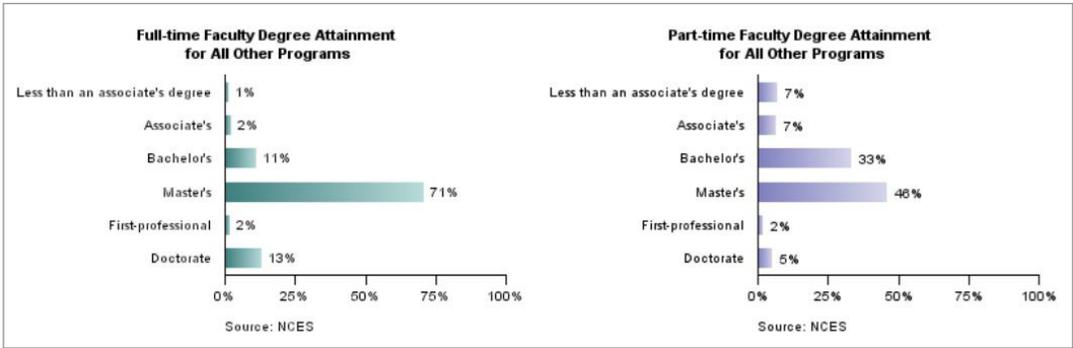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학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들의 취업률은 참으로 안쓰럽고, 국내 시간강사들의 처우는 심각한 수준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연일 치솟는 등록금을 내며 대학원까지 졸업했지만 강사자리 하나 구하기 어렵고, 일주일 평균 강의 시간(4,2시간)을 토대로 강의를 산정해보니 연봉이 60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 나 역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또 여성학이라는 소위 시장성 없는 공부를 한 사람으로, 논문을 마칠 때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나 석사 학위를 가지고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교육기관이 있다면 고학력자들의 실업 문제도 많은 부분 해결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한 번은 MHCC 홈페이지에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한 화학 교수의 이력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다름 아닌 MHCC를 졸업한 사람이었다. 50대 초반의 그녀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화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 그녀는 아마도 30대 중반이었을 것이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화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녀는 화학 교수로 삶의 전환을 이루었고, 그걸 가능케 한 것이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나와 같은 곳에서 출발한 사람이 지금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 통계는 커뮤니티 칼리지 강사들의 대다수가 석사 학위 소지자임을 보여주는데, 혹자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커뮤니티 칼리지의 교육의 질이 4년제보다 훨씬 떨어진다고도 말하며, 명망 있는 로스쿨이나 메디컬스쿨을 가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조언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교육의 질이 강사진의 박사 학위 소지 여부에 달려 있기 보다는 강사 개인의 자질과 커뮤니티 칼리지의 교육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2009년 통계에 따르면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한 학생들의 평균 연령이 29세이며, 절반에 해당하는 49%의 학생이 파트타임으로 학교에 적응을 두고 있었다. 이렇게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사람에게 공부를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Faculty & Administrators > Faculty & Administrators - Mary Bernadette Harnish	
FACULTY & ADMINISTRATORS	
Index	
Mary Bernadette Harnish (2008)	
Instructor	
Chemistry	
Degrees	
MS, Portland State University, 2004	
BS, Portland State University, 2002	
AA, Mt. Hood Community College, 2000	

MHCC의 한 화학 교수의 약력. 그녀 역시 MHCC에서 공부했다.
(출처: <http://www.mhcc.edu/FacultyAndStaff.aspx?id=1451>)



파트타임, 풀타임 강사직을 통틀어 석사학위 소지자가 제일 많다. (출처: American Association of Community Colleges <http://www.aacc.nche.edu/AboutCC/Trends/Pages/facultydegreeattainment.aspx>)

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이 따라갈 수 있는 학업 양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또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처음 공부를 시작하며, 별 거 아닌 것에 칭찬을 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참 특이한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계속 학업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칭찬과 격려가 무엇보다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뒤늦게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 나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

커뮤니티 컬리지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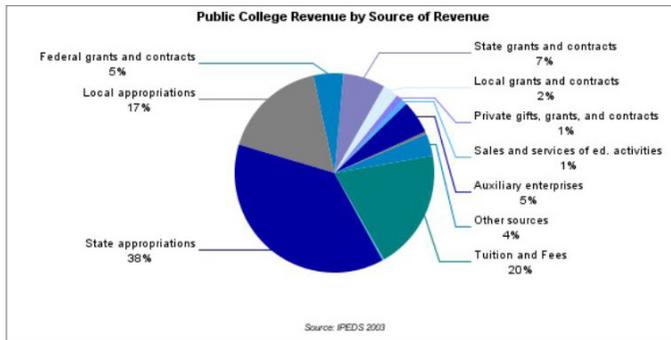
커뮤니티 컬리지의 재원은 일차적으로 주 정부(State)의 지원금이며 그 외 학생들이 내는 학비와 지역 기금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 오바마 정부 이후 연방의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많이 늘었다. 공립 커뮤니티 컬리지는 이렇게 공적 자금이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므로 자금의 쓰임 역시 ‘교육위원회 (board of education)’ 를 통해 관리된다. 교육위원회는 4년의 임기를 갖는 무보수 선출직으로, 학교가 속해있는 행정단위에 거주하는 7명의 시민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사립학교의 이사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예산 승인, 교육프로그램 승인, 그리고 교직원의 고용과 해고 등에 관한 의사도 결정한다. 교육위원회의 역할 중 하나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다. 공교육은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교육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학교와 관련된 정보들을 모으고 배포하는 일에서 지역사회와의 의사소통 과정 설계도 주요한 몫이다.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학교의 중심 주체는 학생이다. 비록 ‘거쳐 가는’ 학교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긴 해도, 학생회를 통해 학교와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다. MHCC의 경

우에는 학생회 안에 학교 측과 재정을 협의하는 담당자가 예산처와 매주 회의를 통해 다음 연도 예산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눈다. 이곳에서 결정된 의견은 다시 학생회에서 논의되고 여러 차례 의사 결정 라인을 거쳐 MHCC의 총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올해 MHCC는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예산검토부서를 신설하여 결정된 예산을 리뷰하는 과정을 새로이 도입하고, 이 과정에 학생회 멤버 2명을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학생과 전 교직원들에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문을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해 큰 틀 안에서라도 이해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내용의 질은 잠시 차치하더라도 지역과 교직원과 학생이 커뮤니티 컬리지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틀을 계속 만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평생학습이 활짝 열려있는 곳, 커뮤니티 컬리지

하지만 사람들이 만든 제도가 언제나 그렇듯, 커뮤니티 컬리지 역시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위원회와 교직원들의 불협화음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으며, 처음 실시된 예산안 설문조사는 저조한 참여로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커뮤니티 컬리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커뮤니티 컬리지가 지역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지역사회



주 정부의 지원이 재원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커뮤니티 컬리지는 공적 자금으로 유지된다.

	FY 2002	FY 2010	FY 2010 vs. FY 2002	%
Tuition and Fees	\$ 146,895,700	\$ 282,996,948	\$ 136,101,248	92.65%
State Aid	153,726,295	176,836,455	23,110,160	15.03%
Local Support	60,003,850	99,464,652	39,460,802	65.76%
Federal Funding	29,501,900	81,062,466	51,560,566	174.77%
Sales and Services	7,404,636	7,147,771	-256,865	-3.47%
Other	104,793,757	201,359,138	96,565,381	92.15%
Total	\$ 502,326,138	\$ 848,867,430	\$ 346,541,292	68.99%

Source: Department of Education, Division of Community Colleges and Workforce Preparation, AS-15E Reports

아이오와 주의 커뮤니티 컬리지의 재원 본 포 추이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커뮤니티 컬리지 장려 정책 이후 주 정부 및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크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출처: http://www.iavalley.cc.ia.us/district/images/legislative_images/Community%20College%20Revenue.pdf)

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지역민의 지식과 삶과 경험이 지역사회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커다란 창구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이다. 누구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곳,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두에게 열린 배움의 공간. 어떤 형태가 되었던 이와 비슷한 교육기관이 우리 사회에도 생기기를 희망한다.

4. 일본의 공동학습

1) 사회교육, 풀뿌리 주민자치와 공동학습의 힘

주민으로서 사회교육과 만나다

일본의 평생학습이나 주민활동을 생각하면 흔히 떠오르는 것이 많은 학습모임과 꼼꼼히 학습이나 활동을 기록한 기록물들일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평생학습 문화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사회교육 제도와 지원이 있었다.

한국의 평생교육이라는 개념과 유사한 것이 일본의 생애교육(학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보다 일본인들의 생활 속에는 ‘사회교육’이라는 현상이 있다. 일본인들은 자신의 지역, 사회, 교육현장에서 작은 학습모임을 갖고 문화 활동을 하며 자치 등을 배우고 익힌다.

필자는 일본에서 사회교육을 전공했는데 사실 처음부터 사회교육을 전공하겠다고 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본에서 일본어 대학원 준비를 할 때 사회교육시설인 ‘공민관’에서 일본어 교실을 접하고 이후 유학생으로, 주민으로, 엄마로 살아가면서 사회교육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났다. 물론 석·박사 과정에서 일본의 사회교육 및 평생학습을 연구하기도 했지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본의 사회교육을 접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아시아를 알고자 하는 강좌와 모임에서(이는 대부분 지역의 공민관에서 자주 학습 모임이나 강좌 형태로 열린다) 돈이 없었던 유학생 시절 저렴한 숙박시설인 청년의집, 자연의 집 등에서, 또한 각종 숙박형 사회교육시설, 지역마다 있는 도서관, 깔끔한 여성교육시설, 여성들의 학습모임, 주민자치 모임, 각종 위원회 등 반드시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사회교육과 평생학습은 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일본평생교육의 특징과 역사적 발자취를 알아보고 현재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자.

일본평생학습의 특징

일본의 평생교육은 패전(1945년)을 기점으로 큰 전환을 겪었다. 전전(戰前)의 국가주의, 군국주의적인 교육체제를 반성하고, 전후에 국민주권, 민주주의, 평화주의 이념에 기초한 사회교육으로 새로운 첫 발을 내딛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법제를 갖추고 시설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해왔다.

가장 우선적으로 한 것은 법제를 정비하려는 노력이다. 전후 제정된 헌법(1946) 정신에 입각하여 교육기본법이 제정(1947년) 되었으며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 교육기본법 안에 사회교육에 관한 조항(제7조)이 삽입되었다. 이것을 토대로 사회교육법(1949년), 도서관법(1950년), 박물관법(1951년) 등 평생학습 관련 주요 3법이 연이어 성립되었다. 이 중 일본 평생학습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회교육법은 내용적으로는 공민관에 관한 조항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실질적인 의미에서 ‘공민관법’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둘째는 이러한 법 제정에 힘입어 시설을 확보했다. 이는 교육기본법 제7조 제2항을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교육 조건정비, 환경조성에 관한 구체적 임무로써 공민관, 도서관, 박물관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것이다. 전전(戰前)부터 일본사회교육은 ‘비시설, 단체 중심성’이었는데 이는 빈곤한 시설과 반관반민(半官半民)단체를 통한 교화주의적 사회교육이 주류를 이루었던 실태를 개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공민관, 도서관, 박물관 등의 사회교육시설은 단순히 건물의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제상으로는 학교와 대등한 교육기관으로 규정되었다.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구비조건은 각 기관에 필요한 시설, 설비 등의 물적 조건, 전문성을 지닌 직원을 포함한 인적조건, 고유의 전문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의사와 구체적인 사업 전개 등 기능적 조건들, 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했다. 물론 법제상으로는 실태에서도 학교교육기관과 비교하여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제반요건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특히 인적 조건인 전문직(공민관 주사, 도서관 사서, 박물관 학예원 등)제도에 있어서는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비정규직 문제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자치와 학습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점이다. 전후 교육개혁의 지방분권 원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를 존중하고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교육 및 행정이 지역중심주의와 주민자치의 원칙을 중시하며 전개되어 왔다. 거기에는 전전(戰前)의 국가 집권적인 사회교육에 대한 강한 반성이 존재하였고 지역의 필요에 따라 실제 생활에서 주민의 자치와 참여를 기본으로 한 관점이 강조

되었던 것이다.

주민자치 원칙은 전전(戰前)의 통제적 사회교육의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하게 통제나 지배를 해서는 안 되고 주민의 자치와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각 시·도마다 운영심의회나 이용자 연락회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물론 지역적인 격차는 있지만 행정·시설 사업에 주민의 자치와 참여구조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실제적인 활동과 실천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축적되어온 점은 큰 의미를 갖는다. 필자 또한 유학생 신분이지만 지역 공민관에서 ‘이용자 연락회’ 및 각종 위원회 활동을 권유받고 또 하기도 하였다.

일본평생학습의 발자취

(1) 1945~1950년대, 지자체 행정정비·시설 보급기

앞서 말한 법제정으로 지자체의 사회교육 행정조직이 어느 정도 정비되고 공민관을 중심으로 한 여러 시설이 보급되어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사회교육행정과 시설 체제에 어느 정도 근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학급 진흥법’(1953년)이 많은 논란 속에 만들어졌고, 이에 대항하여 일어난 지역 청년운동 주도의 ‘공동학습’도 주목할 만하다.

(2) 1960~1970년대, 지역변모·사회교육 약동기

사회교육법의 대개정(1959년)으로 고도경제성장정책에 수반되는 급격한 지역변화와 도시화에 의해 기존 사회교육의 농촌적 기반이 상실되고 도시적인 사회교육활동이 추구된 시기이다. 도시 근교에서는 시민계층 주도의 주민운동이 태동하여 주민주체의 학습 및 문화활동과 시설설립 운동이 확대되어 갔다. 이시기에 각종 현대사회문제에 대한 학습과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사회교육 관련 자들도 매우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지역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각종 선언문을 발표했다.

(3) 1980~1990년대 전반, 평생학습이행·사회교육정체기

중앙교육심의회의 ‘생애교육에 대하여’(1981년), ‘임시교육심의회의 교육개혁에 관한 답신’(1987년) 등에 의한 평생교육 도입과 평생학습체제로 이행 시책이 전개된 시기이다. 법제적으로는 ‘생애학습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체제 등 정비에 관한 법률’(1990년)이 성립되었다. 동시에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개혁, 재정합리화 시책과 버블경제의 붕괴로 지자체 사회교육과 평생학습의 공적 조건 정비가 향상되지 않고 오히려 시설위탁, 직원삭감, 예산삭감 등의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사회교육과

평생학습 간에 혼동도 일어나 지자체 사회교육의 실태는 오히려 후퇴와 침체 상태가 적지 않았다.

(4)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사회교육재편 · 전환기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사회교육 공적체제의 재검토, 시장원리의 도입, 규제완화, 시설의 민간위탁(이를 지정관리자 제도라고 함)등의 시책이 도입되고 사회교육법과 공민관 설치 기준 등의 개정(1999년, 2001년, 2003년)이 줄을 이은 시기이다. 또한 신보수주의 노선에 따라 교육기준법 개정(2006년)과 기타 사회교육법 등이 개정되었다.

대규모의 시정촌 합병, 지방재정의 긴축, 자치 단체장 직속행정으로 사회교육시설 흡수 통합 등 동향 속에서 사회교육 행정 및 시설을 축소, 개편, 폐지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한편 이 시기에는 자원봉사, 시민활동, 사회공헌 활동이 전개되었으며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1998년)의 제정으로 법인격을 지닌 시민단체들이 독자적이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일본평생학습, 오늘의 자화상

(1)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1990년대부터 2000년 이후 일본의 사회교육과 평생학습은 정체와 혼미, 전환과 재생이라는 단란한 세월을 겪고 있다. 그 배경에는 앞서 말하였듯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시장원리도입, 규제완화, 재정삭감, 민간 위탁 등의 여러 시책들이 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사회교육과 평생학습의 여러 조건 정비 수준이 후퇴되어 직원 집단이 해체되고 실제 사업과 활동이 자치적인 전망을 상실해 가고 있는 지역도 있다. 행정주도로 진행되어 온 사회교육과 평생학습의 행정개혁-행정시책의 후퇴와 재정조건 축소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약 60년간 축적된 것을 바탕으로 한 발전과 새로운 태동도 보이게 된다. 정책과 행정의 관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시민과 주민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풍경이 나타나고 있다. 그간 지방분권의 흐름도 있었기에 지자체의 자치적 역량과 시민의 네트워크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행정 개혁 추진으로 사회교육이 전환기를 맞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만들기, 마을만들기에 대한 역할을 사회교육에 기대하는 움직임도 두드러지고 있다. 오랫동안 이어진 행정주도의 지역만들기, 마을 만들기를 시민 주도형으로 전환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행정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연계하고 서로 전문성을 발휘하는 ‘시민협동’ 지역만들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지역만들기,

마을만들기의 주체인 시민역량(시민력)형성을 사회교육(시민교육) 현장에서 기대하고 있다.

(2) 시민네트워크 및 NPO와 점점 찾기

일본 사회교육 및 평생학습을 둘러싼 정체와 전환이라는 측면과 시민활동의 태동과 재생이라는 두 측면은 특히 오늘날 공민관이 놓인 상황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행정이라는 면에서 보면 공적시설인 공민관의 조건정비는 확실히 후퇴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민관과 관련한 시민의 참여와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동안 다채로운 시민, 그룹들이 공민관을 거점으로 활동하였다. 그들은 적극적인 지역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공민관을 지탱하는 시민네트워크가 확산되고 있는 지역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공민관 활동에서 NPO활동이 태동하고 지역복지와 연결된 공민관 사업이 창출되거나 소지역, 마을 단위의 주민자치에 뿌리내린 자치 공민관이 활약하는 등 많은 지역 사례들이 있다.

지방의 경우 도시의 인구 집중과는 반대로 과소화와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한계마을’이라고 불리는 지역도 출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에서도 지역의 재생과 활성화가 강조되며 마을살리기의 관점에 입각한 사회교육이 요구되었다. 마을만들기가 인재양성과 사람 만들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교육으로 음악제나 영화제, 인형극 등을 통한 마을만들기 등 지역성을 반영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재해 속에서 다시 재조명되는 공동체 학습

2011년 일본 동북지역을 강타한 쓰나미 재해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개인주의적 삶에 대해, 개발 위주의 경제발전의 대해,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되돌아보고 있다.

특히 쓰나미가 있었던 일본의 동북지역은 필자가 유학생할 때 했던 센다이에서 가까운 곳으로 2012년 8월 다녀왔다. 어느 정도 복구는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상처와 복잡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생생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쓰나미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뮤지컬 공연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만이 살아남았다는 죄의식 등 복잡한 감정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 주민중 전에 사회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화 활동을 한 사람이 주축이 되어 뮤지컬 공연을 준비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무척 망설였지만 차츰 자신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함께 터놓고 말하고, 극본을 쓰고 뮤지컬 연습을 하면서 공연까지 하게 된 것이다. 이른바 공동학습과 문화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문제’에서 ‘우리들의 과제’로 인식하

게 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었다.

일본사회는 개발위주와 공동체 붕괴로 극도로 개인주의 성향이 만연하게 되었고 이는 평생교육의 현장에서도 개인적 학습의 중요성과 개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모습으로 많이 만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재해를 딛고 복구하는 과정을 통해 일본사회는 현재를 돌아보게 되었다. 개인주의 삶과 학습의 한계를 새삼 깨닫고 공공(公共)성과 공동체적 삶을 지향해왔던 사회교육적 요소가 사람사회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깨달은 것이다.

* 이 글은 小林文人·伊藤長和·양병찬 공편 《일본의 사회교육 평생학습: 풀뿌리 주민자치와 문화창조를 위하여》(학지사, 2010)을 참고로 하였다. 일본의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 일본주민들의 평생 마을놀이터, 공민관

마을 주민들의 놀이터

일본 사회교육의 특징 중 하나가 시설주의인데 그중 대표적인 시설이 일본사회교육법의 별칭으로도 불리는 ‘공민관’이다. 공민관은 필자에게 연구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혼자만의 독서실로, 도서관으로, 약속 장소 등으로 활용되는 생활터였다.

공민관과의 처음 만남은 지역에 있는 중앙 공민관에서 하는 ‘무료 일본어교실’이었다. 그 곳에서는 다양한 학습동아리들이 스스로 공부도 하고 무엇을 만들기도 하고 요리도 하였다. 1991년 처음 일본에 갔을 때, 한국에 지역시설이라고는 빈민지역 중심의 지역복지관이나 시민회관 정도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당시 이런 공민관은 필자의 눈에는 참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곳이었다. 특별한 강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원 프로그램을 하는 곳도 아닌, 그저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학습하고, 무언가 만들고, 약속도 하는 곳, 남녀노소 모두 들락거리는 그곳은 매우 흥미로웠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때 일본어교실에서 무료로 외국인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쳐주었던 선생님들은 실은 공민관의 일본어교사 양성과정을 통해 공부를 한 주민 자원봉사자였다.

공민관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공민관 주최의 기획강좌 운영이다. 이곳에서 ○○사회학급, ○○인권학급, ○○여성강좌, 탁아양성과정 등 그 시대의 과제를 공부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강좌가 단순히 강의와 수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좌가 끝난 후 같은 주제를 학습

했던 이들이 후속 소모임으로 학습과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 할 수 있도록 공민관측에서 지원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주민들 스스로 기획하는 자주 기획 강좌이다. 강좌는 공민관직원의 기획으로 개설되기도 하지만 각 공민관에 설치되어있는 운영위원회 또는 소모임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개설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배우고 싶은 강좌나 지역에서 필요한 강좌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각 강좌별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기획위원회를 통해 기획부터 평가까지 모두 담당하기도 한다. 필자도 여성학세미나 기획위원으로 같이 참여하면서 테마 설정부터 강사 선정까지 함께 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주민들은 심도 깊은 토의와 회의기법, 실무 등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게 될 뿐만 아니라 공민관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높아진다.

셋째는 강좌뿐만 아니라 누구나 와서 자유로이 학습하고 담소하면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빌려주는 역할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공민관들은 지역에서 다양한 주민모임의 거점이 되고 있다. 흔히 사회교육시설은 ○○아동센터, ○○청소년센터, ○○노인센터 등 연령과 성별 혹은 장애여부로 나뉘어져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공민관은 말 그대로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넷째는 다양한 주민들의 교류장소라는 점이다. 많은 공민관에 작은 카페나 간단한 음식을 파는 코너가 있는데 이곳의 운영은 지역의 장애인, 여성, 고령자 등이 맡아 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인상 깊은 활동 중에 하나는 장애인과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장애인 카페코너이다. 이러한 카페를 통해서 장애인들은 일자리와 자기표현을,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을 만나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곳이다.

공민관 시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많은 공민관들이 3층 건물로 되어있는데 대부분 1층은 교류와 정보의 장으로 되어있다. 1층은 다양한 지역의 소모임 활동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설치하고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모임별 물품보관소도 지원한다. 인쇄 및 복사기 등도 공유할 수 있도록 배치해놓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열려있다. 2층은 강의실, 소모임실, 요리실, 공작실 등이 배치되어 있다. 대부분의 공민관에는

유아나 장애인 고령자를 고려하여 다다미방으로 되어있는 학습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간단하게 차나 다과, 도시락 등을 먹으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탕비실 등이 구비되어 있다. 3층은 다목적실인 체육관이나 강당 등이 있으며 작은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공민관의 역사와 특징

공민관은 1947년 7월 테라나카라는 문부성 사회교육과장의 제안으로 전후 일본의 재건을 목표로 지역부흥과 사회교육을 중심으로 '향토의 종합시설'로 탄생되었다. (공민관은 지자체가 설치(제21조)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법이 제정되었다고는 하나 전국의 사회교육시설이 일률적으로 정비된 것은 아니다. 지역의 사회교육 조건정비를 요구하는 사회교육 직원과 주민운동의 확산 및 고조에 따라 사회교육, 평생학습시설 보급 및 정착은 지자체마다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었다.

전후 60년을 거쳐 전국 지자체에 약 1만 8천관의 공민관(분관 포함)이 보급되어 정착되어 있고 각 공민관마다 약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 가운데 공민관 주사 등 지도계 직원이 1명 정도 배치되어 있다. 공민관에 개설되어있는 학급강좌는 약 125만 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지역의 학습단체 동아리나 개인 이용자는 2억 3천 명 이상이다.

공민관의 설치 상황을 보면 설치율은 89.1%이지만 시(市)는 93.9%, 정(町)은 88.4%, 촌(村)은 79.7%로 시구 정촌별 설치율에서 차이가 난다. (공민관 커뮤니티 시설 핸드북, 일본공민관학회편, 2006년) 설치율도 다르지만 공민관은 그 수만큼 다양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1963년에 오사카부의 히라카타 시는 사회교육의 주체는 시민이고, 사회교육행정은 지역주민의 자치 능력형성을 통해 민주주의의 확립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천명하고 이와 같은 활동의 장으로 공민관을 지정하고 공민관 주사를 사회교육 전문직으로 규정하였다. 히라카타 시 사회교육 행정의 기본방침인 '사회교육을 모든 시민에게'를 '히라카타 선언'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역에서 사회교육 실천을 지원하는 공민관 주사의 직무에 대해 나가노현 이이다·시모이나지역의 공민관 주사회는 1965년 '공민관 주사의 성격과 역할'을 발표했다. 이를 '시모이나 선언'이라고 한다. 또한 공민관의 전국 조직으로서 사단법인 전국공민관연합회가 1951년에 결성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수도 도쿄의 베드타운인 산타마 지역의 공민관 활동방향에 대하여 공민관은 주민의 자유로운 유희공간의 장이며 주민에 의한 문화창조의 광장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견해는 도시형 공민관상을 제시한 것으로 '타마 선언'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제시된 도시형 공민관

상은 1960년대 이후의 고도 경제성장속에서 발전한 도시부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의 요구에 기초한 공민관 건설을 추진하는 지침이 되었다.

사회교육 기관인 공민관의 사업 및 활동을 수동적·소비적인 ‘교육의 장’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지역자치 및 문화를 창조하는 주체형성의 장으로 인식하고 지역생활을 통한 주민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학습·문화 활동의 거점으로 공민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7-80년대 활성화 시기를 거쳐 전후개혁의 총결산, 공민관의 통폐합, 사업단 위탁, 민영화, 시민센터화 등이 추진되면서 사회교육시설인 공민관의 공공성과 독립성은 점차 후퇴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90년 생애학습 진흥정비법 제정으로 인해 생애학습에 대한 국가통제의 강화와 신자유주의 원리를 받아들이면서 상대적으로 지자체들은 공민관의 존재가치를 경시하게 되었다.

이처럼 전후 일본 공민관 60년의 역사는 정치와 경제동향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지역 정착도 각각의 단계에서 정치·경제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것이다. 지자체별로 1970년대에 이미 공적 사회교육시설의 조건정비가 어느 정도 진행된 곳도 있었지만, 평생교육 도입과 평생학습으로 이행이 제창된 1980년대에는 국가의 행정개혁과 재정삭감, 그리고 신자유주의 노선에 따른 공공부문의 재검토와 시설 민간위탁 등의 시책들로 인해, 사회교육시설의 공적체제가 오히려 정체되게 되고 재생의 기회를 모색하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초래되고 있다.

물론 전체적인 경과를 보면 60년 세월 동안 사회교육시설의 지역 정착은 전국 규모에서 광범위하게 성과를 거두어 왔다. 각각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도서관, 박물관과 나란히 공민관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보급, 정착되어 간 것은 전후 일본사회교육의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적어도 통계적으로 의무교육기관인 학교시설에 필적할 만한 수준의 수치를 실현해 왔던 것이다.

환갑을 넘은 공민관의 새로운 도전

환갑이 지난 공민관은 현재 큰 기로에 서 있다. 시정촌 합병에 의한 공민관의 통폐합, 지정관리자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지자체 사회교육의 축소와 직원체제의 약화, 관할 행정시스템의 변화라는 경향 속에서 공민관의 일반 행정 조직으로의 이관이나 위탁화 등 공민관을 둘러싼 상황이 힘들게 되어 지역시설로서 공민관의 존재가 문제시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주민의 자치와 역사가 있었던 만큼 지역사회로 눈을 돌리면 지방분권, 사회참여를 지향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역자치, 주민자치의 형성이 강화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지역부흥과 깊이 연관되어 지역주민들의 학습·문화활동의 장소로서 지역

주민들 속에 뿌리를 내린 공민관도 존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민관 시설 감소와 축소는 있지만 환갑이 지난 역사만큼이나 그동안 다채로운 시민, 그룹들이 공민관을 거점으로 활동하였고 적극적인 지역 활동을 자신들의 살고 있는 삶터에서 전개하고 있다.

지역 주민리더들의 탄생에는 공민관과 60년을 함께 한 마을 공공학습시설과 주민과 함께하면서 각종 선언을 한 정열적인 전문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다. 이제 일본의 공민관은 시설과 법테두리를 넘어서 환갑을 넘은 지혜와 유연함을 가지고 마을에서 새로운 세대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는 ‘은발의 청춘’으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한다.

3) 일본 평생학습의 뿌리, 여성

여성은 학습 소비자?

일본이나 한국이나 평생교육의 주요 대상은 여성이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기혼여성으로, 즉 주부라 불리는 엄마들이 평생교육의 고객이다. 각종 공민관, 여성센터, 미술관, 박물관 문화센터의 학습자이며 아이들의 성장과 더불어 각종 문화시설의 주요 고객이 된다. 이런 배경에는 M자형 취업곡선, 저출산, 고학력, 여전한 성별 역할 분담 등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 여성의 공통점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면서 그녀들은 엄마와 주부로서 그리고 지역의 ‘전일제 주민’으로서 생활하게 되어 버린다. 실령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엄마와 주부의 역할에서 자유로운 이는 아직도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그녀들이 잠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어 문화소비자로 그리고 학습자로서 문화쇼핑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삶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지역의 주민으로서 학습과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소비자로서 여성의 학습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학습과 실천으로 지역에서 순환되는지 살펴보자.

개인 생활경험에서 지역실천까지 이어지는 순환적 학습

‘여성 자주그룹’이라는 여성 학습자들의 학습활동 배경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개인의 경험과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이를 지원해주는 지원정책과 시설이다.

실제로 필자가 오랜 유학생생활 동안 한국어 자원봉사를 한 한국어 학습모임도 국제 이해프로그램으로 한국연수 방문단들이 후속 모임으로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려고 만들어졌는데 5년 동안 공민관 시설을 이용하며 모임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학습하려면 이와 같은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커뮤니티 시설이 있다. 여기서는 그 중 하나로 엄마와 며느리라는 개인적 경험을 공동의 해결 실천으로 발전시킨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1) 육아, 탁아, 교육 – 한 아이의 엄마에서 지역의 엄마들로 재탄생

아이를 둔 부모가 그 지역에서 아이와 같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 정보를 일종의 지도형식을 빌려 매년 한 번씩 발간하기도 하고 영유아기 엄마들의 경험을 책으로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들은 아이들의 성장과 더불어 학교제도, 교육문제, 환경문제, 먹거리 문제 등으로 관심이 확대되어 다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또 다른 여성들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2) 탁아 자원활동 – 자신의 고충을 함께 해결하는 학습실천

한국이나 일본이나 M자형 취업곡선은 영유아기의 육아문제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탁아 자원활동 모임의 목적은 육아의 어려움을 직접 느꼈던 여성들이, 취학 전의 아이를 둔 엄마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즉 아이와 같이하기 어려운 각종 학습활동이나 문화활동 행사에서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탁아 하는 것이 바로 이 탁아자원활동의 주목적이다.

모임활동의 산파 역할을 한 것은 커뮤니티센터(공민관)에서 실시하는 ‘탁아 자원봉사 양성과정’이다. 이 과정은 몇 개월간에 걸쳐 탁아에 대해 학습하고 난 후, 학습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탁아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활동의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소 제공과 코디네이터 역할을 커뮤니티센터 측에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커뮤니티센터 측의 지원을 바탕으로 모임활동은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것이 된다.

또한 다른 탁아 자원활동 모임과도 합동정례회 등을 통하여 정보도 교환하고 지역 탁아모임끼리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한다. 그 결과 자신들만의 모임 세계에 안주하거나 닫힌 활동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복되기 쉬운 지역탁아의 문제점을 극복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탁아 자원봉사 활동 덕분에 육아기 자녀를 둔 젊은 엄마들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3) 고령자 수발의 경험을 고령화 사회의 복지 활동으로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일본에서도 아이를 키워놓고 경제활동을 하려고 해도 얼마 못 가 발목을 잡는 것이 양가 부모들의 수발이다. 이들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장에서 만나 문제를 인식하고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서로 돕자는 취지에서 도시락 배달, 심포

지업, 고령자 케어 등을 시작했다. 필자가 인터뷰한 한 모임은 처음부터 고령자 서비스를 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일하는 여성들의 사회 지원을 위해 저녁 배달로부터 시작한 것이 차츰 노인들을 위한 식사 서비스로 영역을 넓혀서 활동하게 된 것이다. 이 활동은 힘들게 노인 간병, 수발을 했던 모임대표자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대부분 가족(주로 며느리)에게 의존하는 노인수발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하자는 것이 활동의 취지이다. 구체적으로는 70세 이상의 독거노인에게 매월 2회 정도 도시락 서비스, 매주 2회 정도의 전화상담 등을 하는 것이다.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출장탁아 활동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일정정도의 활동비를 번다. 이러한 실천 학습활동을 통해 얻어진 생생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시민들을 위한 노인관련 심포지엄 개최 및 모임의 역사와 현황을 알리는 단행본도 출판하고 있다.

위에 소개한 것은 지극히 작은 사례지만 이와 비슷한 수많은 사례가 일본전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의 특징을 단계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나의 문제에서 우리의 문제로

집단 공동의 실천을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들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멤버들의 상호 공감을 토대로 공통의 경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2단계-우리의 문제 우리 손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타자와 공유된 경험을 통해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고 이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도 외재적으로 주어진, 설정된 책임만이 아니라 자발적이며 공동의 책임으로 자각하여 개인적인 문제의 근원을 사회적 문맥으로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

3단계 -행동은 다시 배움으로

‘공동의 배움’이 ‘공동의 실천’으로 되는 과정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의 사이클을 이룬다. 지역의 과제,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동 과제 해결의 실천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에는 공동의 배움이 필수적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학습, 공동실천을 통해서 지역으로 재생산되는 배움이 확산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확산은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해 또 다른 지역의 배움으로 확대된다. 이것은 단계별로 진화되는 것이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이 하나의

싸이클을 이루면서 지역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순환적 학습생태계

공동의 행동을 지속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데는 체계적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연결되어 있다. 여성학습자들은 공동학습 활동을 통해서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공동의 생활 나눔을 통해 서로 신뢰를 쌓고, 정서적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공동 행동의 토대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좌나 커리큘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배움의 과정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실천과 성찰을 통해서 공동의 가치, 신념, 태도 등을 키워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경험지(知)가 공동학습지(知)로 실천지(知)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실천 속에서 다시 새로운 학습요구가 일어나 또 다른 학습으로 이어진다. 이른바 지속가능한 순환적 학습생태계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들의 실천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구성원의 모습, 예를 들어 보육소, 학교, 지역사회 의 각종위원회 모니터 등 지역의 리더 또는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워커즈 컬렉티브, 협동조합의 생산자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생활자의 경험을 토대로 생활정치인으로, 의원으로, 지자체 장으로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선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에는 오랫동안 축적해 온 학습의 힘에 그 뿌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그녀들은 지역이라는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다시 씨앗을 뿌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신이 살아서 생활에 안착하기까지는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많은 여성들의 손길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녀들은 지역교육의 멘토이자 '실천하는 교육자'로서 혈관처럼 마을에 건강한 피가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현재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남성 은퇴자들이 지역주민으로 귀환하고 있다. 이제 일본의 그녀들은 지역평생교육의 선배로서 남성학습자들과 함께 지역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으며 지진과 각종재해로 불안한 지역사회에서 학습실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부흥을 일구고 있다.

여성들의 평생교육은 문화소비자 생산과 취미 교양 활동으로 끝난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그동안 축적된 학습과 문화적 역량을 발휘하여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4) 일본 사회교육의 새로운 도약, 경계를 넘어 공동체를 위한 향해

전환기를 맞이한 일본 사회교육

일본의 사회교육은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축적된 성과와 더불어, 조직과 시설의 경직화·퇴

보화라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주체인 시민과 주민의 기대 및 요구에 대하여 생기고 역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나 에너지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대규모의 지자체 통합(시정촌 합병)이라는 폭풍을 만나 지자체에 따라서는 광역화와 조직재편의 영향이 지금까지 사회교육과 평생학습으로 축적된 성과를 무너뜨리고 있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1990년에 제정된 생애학습추진법과 민영화 속에서 평생학습은 정체와 혼미, 전환과 재생 등 다난한 세월을 겪고 있고 그 배경에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시장원리 도입, 규제 완화, 재정 삭감, 민간 위탁 등의 여러 시책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책들은 일본사회교육이 시설과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주도로 진행되어왔기에 행정개혁-행정시책의 후퇴로 인한 재정조건 축소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지금까지 축적된 것을 바탕으로 한 발전과 새로운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과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새로운 움직임과 점점 찾기

(1) NPO들과 점점 찾기

1998년에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일명NPO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된 지금 현재 일본 전국에 약 3만 5천여 개(2010년) NPO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NPO는 활동 목적에 따라 시민 주도 아래 시민대상의 학습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있으며 사회교육과 관련된 공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NPO도 있다. NPO법에는 활동분야의 하나로써 ‘사회교육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이 규정되어 있으며 약 40%의 NPO가 사회교육 활동을 활동 목적의 하나로 표방하고 있다. 한편 1949년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에서는 “법인의 유무와 상관없이 공적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로 사회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라는 조항으로 사회교육 관련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교육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NPO는 법적인 의미에서도 사회교육 법상의 사회교육 관련 단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사회교육 관련 단체도 NPO법인격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편, NPO도 임의단체 및 서클과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NPO와 사회교육 관련 단체는 그 역사적 형성과정은 다르지만 서로 공통되는 부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교육 분야에서도 마을만들기, 생활의 재구축, 지자체와 협력에서 NPO학습활동을 주목하고 있

다. 참여형 학습의 추진, 지자체 행정과 협력하는 파트너로서 NPO는 일본의 시민주도형 학습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다. 사토오 가츠코²⁶는 NPO를 조사하면서 이들의 60%가 보건, 의료, 복지활동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교육 추진과 마을만들기 추진이 각각 37%, 아동건강육성이 35%라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활동의 주목적은 아니지만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교육을 추진하는 NPO가 많다는 점이고, 이를 종합적으로 NPO의 교육력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70% 이상의 NPO가 지역사회에 학습모임을 제공하고 있으며 과반수 이상의 NPO가 정보 제공과 상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간조직의 NPO센터도 지자체내에 다수 설립되어 있고 연구기관도 많다, 즉, 이들은 학습하는 조직으로서 활동에 수반되는 시민교육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학습하는 조직’으로서 NPO의 의미가 충분히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학습의 과정이 비연속적이고 시스템으로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의 학습을 조직하는 주체로서 NPO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평생학습사회의 담당자로서 그 독자적인 역할을 평가하는 일이 향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NPO는 개별과제를 통해 참여형 학습을 확대 발전시키고 있지만 생활과 노동·환경·평화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사회인식 공유라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주민운동과 사회운동 학습을 프로그램에 넣는 사회교육의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 NPO가 중요한 이유는 조직의 비전을 내걸고 그 활동 가치를 사회적으로 제창하는 것 자체가 교육-학습과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을 창조하면서 전문적인 기술을 향상시키고 인재를 결집하고 있는 점은 직업적인 경험이나 자격을 살린 사회참여를 가능케 한다. 정년 후에도 새로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기회를 발견하거나 협소했던 직업적 경력으로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NPO는 공적인 제도로써 사회교육 혹은 민간업체가 제공하는 평생학습기회와는 다른 활동들과 하나가 되어 공동학습을 축으로 하는 평생학습사회의 제 3영역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토오 가츠코 교수를 비롯한 많은 사회교육학자와 관련자들이 이점을 주목하고 있다.

(2) 지역 만들기와 점점 찾기

지역 만들기와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는 사회교육, 평생학습의 실천적 주제로서 어느 시대에나 중요

26 사토오 가츠코 《NPO의 교육력》 동경대학 출판부, 2004 (일본어판)

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글로벌화의 진전은 이 주제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글로벌화 이면에는 지역사회가 피폐되고 양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젊은이들이 빈곤문제를 떠안고 이와 같은 문제들이 지역사회에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젊은이들의 실업문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시재생, 자치적인 지역공동체의 창출, 시티즌십을 키우는 지역만들기와 평생학습의 계획책정 등 여러 방면으로 지역사회재생을 위해 노력하는데 거기에는 사회교육이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청년들의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사회교육은 대학진학률이 상승하면서 그 역사적 사명은 끝났다고 한다. 그래서 1999년 청년학급진흥법은 폐지되고 이어 ‘청년의 집’이 재편 통합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청년교육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를 대신해서 2003년에 ‘청년자립. 도전플랜’을 책정하고 후생노동성동이 잡 카페(JOP CAFE)와 같은 청년들의 취업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실정에 맞는 청년들의 능력향상과 취업 촉진을 도모하고 고용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원스톱 서비스만으로는 청년들과 취업을 연결시키는 것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기업은 바로 쓸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지만 고용의 폭은 좁고, 학교 교육은 직업교육에 있어서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례대로 배출되는 젊은 노동력은 갈 곳을 잃은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잡 카페에 이어 2006년부터 포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면서 닛트족, 프리터족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교육시설, 지역청년 서포트스테이션 사업을 전국 50여 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학습과 교육, 교류 식사, 대화, 직업훈련들을 하며 유연성 있는 노동학습을 한다.

(3)지역의 운동단체와 점점 찾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지자체 개편과 아웃소싱은 시민성의 육성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과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주체가 필요하며 시민과 협력하는 노조나 시민 운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 중 좋은 사례가 오사카부 모리구치 시의 경우이다. 이들 노조는 중소기업 세업자들의 기업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조사를 하는 도중에 영세기업들의 열악한 상황에 공감하며 영세기업들의 일자리와 주거를 같이 지켜나간 예이다.

지역 만들기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교육, 평생학습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는 사람들이 인사를 나누고 교육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을 활성화하거나 문화를 창조하고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시민교육, 평생학습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지역문제 해결을 전문가와 행정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사람들이 역량 있는 주체가 되어 직접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지역 차원의 집단지성의 힘이다.

필자도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사회교육의 제도권내 활동을 연구하였지만 생활하면서도 지역의 주민으로, 아이 엄마로,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지역에 역동적인, 이른바 주민운동 속에서 이들의 교육력을 발견하였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잡고 진정한 한일 평화를 원하는 시민들이 '고려박물관'이라는 작은 박물관을 만들어 한일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교류하는 놀라운 학습력이었다. 이들의 모임을 지역주민으로서 곁에서 지켜보았는데 어느 대학원 세미나 못지않은 학습과 기록을 하고 있었다. 이들도 10년에 걸쳐 준비하면서 시민들의 후원으로 '고려박물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단체들의 교육력은 사회교육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나 사회를 변혁하는 힘으로 강력히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많은 시민운동과 노동운동 등 이른바 사회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운동단체들의 비판적이고 변혁적인 교육력에 주목해야 한다.

(4) 사회교육 교류의 중심-사회교육 전국추진 협의회

마지막으로 꼭 소개하고 싶었던 단체는 '사회교육추진 전국협의회'이다.

이 협의회는 1963년에 발족하여 매년 여름 실천 활동을 교류하고 이론으로 심화시키고 다시 실천함으로써 이론과 실천의 조화를 이루고 서로의 영역을 알아갈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을 펼친다. 참가자들은 연구자, 사회교육 직원, 주민, 학생 등 다양한 사회교육 관련자로 이루어져 있다.

2012년 심포지엄은 일본의 자유민권운동지였던 고지에서 열렸다. 그 중 인상 깊었던 것은 기조 강연으로 저명한 학자가 아닌 고지 지역에서 평화학습활동을 하는 고등학생이 했다는 것이다. 작은 평화박물관, 문해교육, 오랫동안 야간대학으로써 성인교육의 학습 권리를 보장해준 단기대학의 사례가 당사자들을 통해 릴레이 발표로 이어진 점이다. 저명한 이론가나 전문가의 거시담론이 아닌 지역의 풀뿌리 학습활동을 가장 중요한 점으로 본다는 점에서 이들의 지역성 중시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 수 있다.

경계를 넘어... 따로 또 같이

이제 일본의 사회교육은 실정법의 테두리와 시설을 넘어서 좁은 시야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계성, 네트워크성, 유연성이다. 특히 작년 쓰나미 재해 후 일본사회는 다시 한번 자신들이 살아온 파편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되돌아보고 고독한 현대병을 치유할 수 있는 참다운 인간살이를 위한 있는 공동학습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있다.

그러나 개별화된 시민의 목소리를 얼마만큼 모아 시민의 요구를 끄집어내는 주체로서 사회적인 개혁에 어느 선까지 관여해 갈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그 한계성이 지적되기도 한다. 비판적이고 정치적인 학습이 사회교육 제도권 내에서 밀려나온 상황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사회교육운동의 야성을 되돌아보고 뼈아프게 성찰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우려는 움직임과 공동체를 향한 항해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들의 항해가 신자유주의라는 폭풍, 개인주의라는 암초 속에서도 유연하게 헤쳐 나가기를 기원해본다.

마치며

지금까지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네 나라의 평생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평생교육의 넓은 폭과 방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각 나라별로 중심이 되는 내용과 평생교육 현장에 시사점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한 주요한 이슈들을 정리해보고자 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시민의 자발성과 참여가 평생교육을 얼마나 풍성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주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 시니어들의 학습공동체 U3A나 공동작업장 Camden Town Shed는 시민들의 자발성과 적극적 참여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Tent City University나 Social Science Centre 등 대안교육운동으로 촉발된 자발적 지식 순환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와 협업을 통해 학습의 폭과 깊이, 실천 영역을 다양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학습 경험이 또 다른 형태의 지역활동과 공동체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육아나 자녀 교육, 노인 간병 등 개인의 생활 경험이나 문제의식이 우리의 문제로 모아지고 함께 해결 방안을 도모하면서 공동의 배움과 지역 운동 등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또한 시민의 자발성은 학습의 공공성과 순환성을 동반하고 있었다. 학습자와 교수자를 구분하지 않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식 순환과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교육 전문가나 전문적인 기술자에게 배우는 공부보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타인에게 전해지고 다른 사람의 경험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자연스러운 학습으로 진행된다. 이분법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쌍방향의 공동학습이 평생교육의 지향점이 되어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의 필요성과 방식 등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이 평생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평생교육은 시민의 자발성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민이 적극적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적절한 지원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영국의 평생교육을 지탱하고 있는 NIACE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의 학습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최대 성인교육기관인 WEA도 중앙 정부와 지자체, 제3섹터 단체 및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8,265개의 공공도서관과 약 9만 개의 스포츠클럽, 938개 시민대학, 3,072개의 시민대학 지부 등은 독일의 평생교육 인프라가 얼마나 지역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시설 인프라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적금이나 평생교육대출 등의 지원제도는 직장인들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더 많은 시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독일 정부의 노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 인프라를 통해 평생교육은 독일 시민의 삶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1,132개의 미국 커뮤니티 컬리지, 약 1만 8천 개의 일본 공민관은 가까운 위치와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각 나라의 노력이다. 즉, 평생교육은 시민의 필요와 욕구, 자발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더욱 육성하고 활발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 소개된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네 나라의 제도나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아니다. 좋아 보인다고 무조건 따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환경적 가능성, 제도적 보완성 등을 살피고 우리 나름의 해석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사례들은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떠나서 다양한 시각과 방식을 열어주고 고민의 지점을 확장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 *

building hope together

더 많은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희망을 나눠주세요.



희망제작소는

지역과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대안을 만듭니다.
농촌과 지방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가꿔나갑니다.
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웁니다.
공공리더와 시니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시민의 변혁이는 아이디어를 사회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1만명 시민의 힘으로 움직이는 시민참여형 연구소입니다.

희망제작소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후원회원이 되시면,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각종 강연,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희망제작소 발간도서 구입 및 교육, 강연 수강 시, 할인혜택을 받습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특별한 회원모임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연간 사업 활동을 정리한 에뉴얼리포트를 매년 보내드립니다.

click



후원하기

후원회원 가입 문의 : 02-2031-2130 / give@makehope.org

후원계좌 :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희망제작소)

